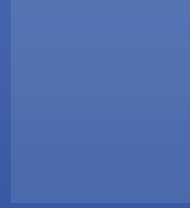


Proceedings

IGE 학술세미나

G20 서울정상회의와 개발의제



 세계경제연구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후원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한국정책금융공사

IGE 학술세미나
G20 서울정상회의와 개발의제

 세계경제연구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후원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한국정책금융공사

머리말

금년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오는 11월 서울회의에서 이른바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또 앞으로 다년간에 걸친 행동계획(Action Plan)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개발의제란 워낙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주제를 G20 정상회의 의제로 삼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거치고 또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실로 이 의제는 비단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의 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올 정상회의에서도 계속해서 논의되고 다듬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7일 서울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렸던 세미나의 결과를 담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우선 현재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준비상황이 기초연설을 통해서 발표되었고, 그리고 개발의제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또 이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진지한 토론도 전개되었다

우선 이창용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은 그의 기초연설에서 왜 개발의제가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의제로 다루어져야 하는지, 기존의 개도국 문제를 다루는 다른 국제기관에 비하여 G20의 비교우

위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현재 다년간 행동계획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있다. 심지어 개발의제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예상질문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KDI의 임원혁 박사가 발표한 논문은 소위 개발경험공유를 통한 G20의 공조방안을 다루고 있다. 다분히 이론적 검토에서부터 출발하여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개발경험을 후발 개도국이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실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어서 발표된 허장 과장의 논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공적개발지원(ODA)이 수원국은 물론 공여국 모두에 이익이 되고 또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를 묻고 있다. 그는 특히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ODA의 유용성과 한계성을 분석한 후 그것이 G20 차원에서 어떻게 개도국의 성장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상의 발표에 대하여 토론을 맡은 이계우 박사는 단순한 토론자로서의 역할과 범위를 훨씬 넘어 거의 새로운 논문발표에 가까운 토론을 전개하였다. 그는 먼저 G20이 G8에 비해서 대표성(representative legitimacy)은 크게 강화되었지만 효과성(effectiveness legitimacy)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후, 그러나 G20이 10개국 이상의 중진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점을 활용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개발의제를 도출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그는 Two-gap 개발의제(선진국과 중진국, 그리고 중진국과 후진국 간의 개발 갭을 분리해서 줄여나가자는

것)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Two-gap agenda를 실제로 작성하고 또 이를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 세미나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G20 정상회의 개발의제는 과연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내 전문가들 간에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정수 박사는 먼저 만약 G20이 제도화(institutionalize)되지 못한다면 그 존재감이 크게 약화되거나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G20 안에 개발위원회를 상설하여 재원확충은 물론 행동계획을 만들어 G20의 동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고 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태호 교수는 소위 개발의제는 기존의제에 비해 긴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의 정지작업이 매우 중요하고, 또 앞으로 이 의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존의제(예를 들면, 균형 성장을 위한 Framework)에 연계시키고 그 범위도 실천 가능한 선으로 축소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또 G20 안에 상설위원회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기존의 국제적 전문기관(예를 들면, World Bank, UN, OECD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제민 교수는 일방적인 원조보다는 무역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개도국의 성장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G20이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의제를 선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는 또 개도국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환율유지가 중요하므로 경제개발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들에게 환율설정권을 허용하는 방안, 그리고

선진자본국의 자본이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개도국에게 일정부분 자본통제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전승훈 원장은 정부의 G20 개발의제가 “성장(growth)과 복원력(resilience)”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지구촌 공동체가 해결하여야 할 기본 과제로 식량, 물, 에너지 그리고 기후문제를 들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정병화 과장은 현재 G20 개발이슈 선정은 주로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에서 워킹그룹회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관련 국제기구들도 기술자문그룹으로 여기에 참여시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또 청중으로부터의 흥미 있는 질문에도 충실히 임하여 주었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에서 개선된 여러 가지 제안과 권고가 G20 준비위원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세미나를 후원해주신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유재한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의 김동수 행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세미나를 주선하고 준비해주신 서강대학교의 조윤제 교수(세계경제연구원 고문)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10년 10월

세계경제연구원
원장 남 종 현

차 례

머리말	3
개 회 사 남 중 현	9
기 조 연 설 이 창 용	11
제1세션: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G20 정상회의의 개발의제	
한국의 경제발전과 Knowledge Sharing Program: 개발경험 공유를 위한 G20 공조방안 임 원 혁	21
한국의 대외개발 협력정책과 G20 정상회의 Agenda 허 장	47
토 론 이 계 우	57

제2세션: [패널토론]

G20 정상회의와 개발의제 -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 71

김 정 수

박 태 호

이 제 민

전 승 훈

정 병 화

프로그램 89

개 회 사

남 종 현
세계경제연구원 원장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도 어제 남미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우리 어린 여자 축구선수들이 올린 쾌거를 직접 보셨거나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분명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는 11월 한국 역사상 또 하나의 페이지를 장식할 G20정상회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반드시 이것을 성공으로 이끌어 세계는 물론 우리 후세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기록을 남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바로 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시간을 할애하시어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이창용 기획단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발표자, 토론자, 사회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세계경제연구원 세미나에 한결같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회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세미나 주제는 이번 정상회의를 위해서 한국이 특별히 제의한 이른바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입니다. 이 주제는 현재 UN회원국 192개국 중 G20회원국 20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172개

국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주제는 또한 지금까지 G20정상회의에서 다루어온 금융관련 주제 등과는 성격이 다른 매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가난한 나라들에게 잘 살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는 것인데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지난 50년 동안에 세계 최빈국에서 OECD국가가 된 한국의 경험이 하나의 중요한 반면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세계에는 한국보다 더 우월한 정책을 통해서 더 잘 경제개발에 성공한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의 선진국들도 한 때에는 개도국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 나라들의 경험으로부터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나 정책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내고 또 그것을 어떻게 경제환경이 다른 개도국에 접목시켜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동안 G20준비위원회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오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을 한국의 전문가들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걸러본다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지혜와 힘을 모아서 오는 G20정상회의의 성공은 물론, 특히 개발의제에 채택에 성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기 조 연 설

이 창 용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개발의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개발의제를 우리가 주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도라는 표현은 자화자찬이라고 본다. G20 정상회의에서 지금까지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위기관리-금융개혁, 거시경제정책공조, IMF 개혁-가 주요 주제였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위기가 끝나고 나면 G20의 임무가 끝나고 사라지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나올 것이고, G20가 전세계경제가 다극화되는 과정에서 G8만으로는 모든 세계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서 만든 체제인데, 위기가 지났다고 해서 다시 G8체제로 간다든지 다른 체제로 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국가적인 측면도 고려했다. 특히, 조운제 교수 말씀대로 비G20국가 관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G20이 단순히 위기관리 수단이 아니라 위기 이후에도 전세계 국제문제를 다루는 주요 체제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했다. 그래서 금년 3월 이후부터 개발 주제를 11월 G20 정상회의 주제로 삼자라는 주장을 해왔다. 그래서 ‘주도했다’라는 말씀은 의견을 먼저 냈고, 그 뒤부터는 G20 회원국들로부터 같이 개발의제를 추진하는데 대해 많은 동의를 받아서 추진 중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개발의제를 논의하겠다고 하니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현재

전세계에서 개발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엔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있고, OECD 내에서도 개발의제를 다루고 있으며, 세계은행이라든지 유엔산하 각 개발기구에서도 개발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G20이 개발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것이다. 유엔으로부터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것이냐 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복적으로 하려는 것이냐 라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개발의제를 다룬다고 할 때 G20만의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G20만의 부가가치(value-added) 창출가능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었으며 그래서 G20 개발의제는 경제성장과 복원력(resilience) 중심으로 추진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시다시피 유엔 중심의 MDG는 개발 이슈를 빈곤타파, 교육문제, 여성문제, 보건문제 등 사회적 지표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또한 OECD DAC 공여국 중심으로는 어떻게 원조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원조를 줄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 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G20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할까 검토하다가 성장과 복원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경제성장을 통해서 후진국들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빈곤문제와 사회지표 개선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엔 MDG 목표달성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혹자는 경제학자라고해서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두고 1970~1980년대 경제성장만 강조하면서 옛날이론(복지라든지 부패 같은 문제 해결)으로 돌아가자는 것 아니냐 라는 비난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일종의 비교우위를 통해 기존의 개발문제를 다루는 여러 기구들과 분업체제를 갖추자는 의도다.

예를 들면, 이번 캐나다 G8 정상회의에서는 G8국가들이 공여국 중심

으로 모였기 때문에 모성보건에 대해 펀드를 얼마 내고 지원하자는 것을 개발의제로 삼았다. 그러면 G20도 유엔 MDG 의제 하나를 고른다든지, 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의제를 추진함이 바람직 할지 검토해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경우 G20 개발의제가 유엔에서 하는 일, G8에서 하는 작업과 차별이 되지 않고, 왜 중복된 의제를 추진 하느냐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모성건강이 라든지 보건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개발의제이다. 그러나 보건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았다. 직접 약을 준다든지 모성 보호를 위해 병원을 지어준다든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가 필요하니 의사나 간호사를 교육시키는 교육체제를 만들 수도 있다. 병원까지 가려면 도로에 대한 접근성도 있어야 할 것이다. 도로 접근성이 없으면 병원을 아무리 지어줘도 소용이 없으니 개도국의 경우에는 도로 같은 인프라를 만들어줘서 병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방법으로 보건문제에 접근할 수도 있다. 현재 빌 게이츠 재단과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는 MDG 활동에서는 펀드를 만들고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약을 사주고하는 민간 부문 영역에 많이 집중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G20은 정부 간 모임이므로 조금 더 공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 비교우위가 있고 분업체제가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했다. 예를 들면, 의사와 간호사 양성 문제가 민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같이 힘이 좋고, 또 병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도로 같은 인프라를 닦는 것도 정부의 영역에 속한 문제이다. 따라서 G20이 민간 부문이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재정적 지원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약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했다. 그런 면에서 경제성장과 복원력에 관심을 두고 개발의제를 추진키로 했다. 여러 분야가 경제성장에 연관이 되지만 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면, 무역의 기회와 가능성을 넓혀줘서

개도국들이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사회적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여기는 인적 자본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UN과 OECD의 접근방법을 보완하면서도 차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전략을 세웠다.

그렇다고 이러한 기존의 개발노력을 부인하거나 폄하코자 한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은 올해 G20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가 거시경제정책공조를 통해 위기 이후 전세계가 어떻게 하면 동반성장을 통해 위기도 극복하고,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는 점도 감안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릴 때마다 첫 번째 회의안건이 프레임워크(framework)로서 거시정책 공조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다. 그래서 G20차원에서 개발의제를 추진하면서 기존 주제와 다르게 한다면 위기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왜 다른 주제를 다루느냐 하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제와 연결해서 개발 이슈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전세계에서 강한 경제성장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생각해보면 선진국들은 금융위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시장을 이끌어가는 기관차 역할을 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 향후 10년 동안 전세계경제를 이끌어갈 총수요는 어디서 올 것인가?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과 같은 신흥시장국들의 소비와 아프리카나 아시아와 같은 개도국들로의 투자, 특히 인프라 투자가 전세계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여력이라고 본다. 결국 개발도상국들의 소비와 저개발국으로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개발 이슈만이 전세계의 강한 성장과 균형 성장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지금은 신흥시장국들이 무역수지흑자로 미국의 국채를 샀

던 것과 같은 순환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이 가중되고 있는데 신흥시장국들의 흑자가 미국의 국채가 아니라 개도국으로의 투자로 활용되면 글로벌 재균형(global rebalancing)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시적인 생각을 했다. 그래서 개발을 더 이상 선진국들이 원조를 통해서 후진국들을 도와준다는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개도국 자체도 하나의 성장의 축으로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글로벌 재균형에 기여할 수 있는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개발 이슈를 경제 이슈로 부각시켜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0년 이후에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7% 이상 고속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프리카는 암흑의 대륙이고 성장해봤자 안 된다는 1980~1990년대 시각과는 달리 이제는 전세계가 다변화된 축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개도국을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생각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전략을 세웠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철학이자 큰 틀로서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개발을 다시 보자는 큰 틀을 하나 만들었고, 그 틀 밑에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코자 한 것이다. 행동계획은 인프라, 무역, 교육, 지식 공유, 지배구조(governance)와 같은 분야로서 G20회원국에게 각각 3개씩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하라고 해서 60~70개 받은 뒤 십여 개로 줄이고 있다. 그래서 서울정상회의 때 다년간 행동계획으로 발표해서 앞으로 2~3년간 G20이 이 계획을 어떻게 실행해 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황이므로 현재 이 자리에서 미리 얘기할 수 없고 큰 원칙에 대해서만 말씀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이 기회에 오해가 많은 질문 몇 가지와 그에 대하여 답변하므로써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접근방법에 대

해서 부정적인 견해나 오해가 생기는 경우 이에 대해 여기 계신 분들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첫째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닌가? 선진국들처럼 펀드를 만들어서 돈도 내고 해야 개발의제인데 경제성장하자는 원칙만 제기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선진국들이 그 동안 펀드를 만들자는 약속을 많이 했다. 그 약속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약속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한 약속보다는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인프라 애로사항(bottleneck)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언뜻 봐서는 한두 달 사이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크게 거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개발의제라고 본다. 홍보만을 생각했다면 우리도 펀드 만들고 개발도상국 몇몇 정상들과 함께 사진 찍어 신문에 내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거시적인 틀을 바꾸고 개발의 중추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한국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보았다. 그런 면에서 구체성과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 다년간 행동계획에는 어떻게 하면 인프라 펀딩을 늘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민간 자본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말잔치라는 것은 심한 평가라고 본다.

두 번째 경제성장만 강조하고 인권, 녹색성장, 적정성장, inclusive 성장처럼 성장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접근법이 UN 접근법과 반대라는 오해가 많이 되고 있다. 특히, NGO 중심으로 그러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온다. 다시 언급하지만 우리는 MDG나 유엔에서 하고 있는 복지증진을 적극 지지하며, 다만 달성 방법이 정부가 해야 할 부분을 통해 그것을 효과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자

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한국이 경제성장에 성공했다고 해서 한국 경험을 자랑하고 일방적으로 전수코자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만든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한다. 특히 국내신문에서 그러한 지적이 나오는데 이도 오해에 따른 것이다. 저희들의 주장은 과거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처럼 두루 적용되는(one-size-fits-all) 것을 해야 개발에 성공한다는 것은 틀렸으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나라의 국내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성공한 개발국가를 보면 그 나라 정책이 훌륭해서 성공한 것이지 외부에서 아무리 지원하고 지식을 전수해서 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도국을 경제성장의 파트너로 보고 그 나라가 올바른 정책을 하도록 조언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전수한다거나 옳다고 주장할 의도는 전혀 없다. 임원혁 박사께서 평소에 “물고기를 잡아줘서는 안 된다.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우리의 접근방법은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너희 나라에서 잘 잡을 수 있을지 같이 얘기해보자.”라는 것이다. “우리는 옛날에 물고기를 이렇게 잡았는데 너희 나라에서도 어떻게 잘 잡을 수 있을지 얘기해 보자.”라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돼 조금 전 언급했듯이 인프라, 무역, 지식전수, 인적자원개발에 대해서 구체화될 수 있는 작업들을 현재 회원국들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국가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 그것을 반영해서 구체적인 산출물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지금 나온 철학 이상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 정상 회의에서는 말씀 드린 철학이 하나의 결과물이 되고 동 철학과 아울러 그 철학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발의제를 추진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자는 것이다. 개발의제를 정할 때 지금까지는 원조 공여국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주도했다면 우리는 가급적이면 아프리카나 아시아 개도국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개발의제를 추진하면서 감명받은 점은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났을 때 원조보다는 한국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달라고 한다는 점이다. ‘한국이 1950~6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 과연 WB (World Bank)나 IMF나 선진국들이 이 계획에 찬성해주었는가? 당시 한국 수준에는 고속도로보다는 시골길을 정비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보다는 국민학교를 세워서 걸음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이 결국 고속도로로 건설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을 세워서 고속 성장 한 것 아닌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했다. 지금 WB라든지 유엔 등 많은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이 희망하는 방향보다는 희망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가는 것 같으니 재원을 내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언급해주는 것만으로도 자기들한테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자기들에게 보건 등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이런 것을 한국이 강조해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했다. 우리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경제성장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아프리카에서 보니 그렇지 않는 현실도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저희는 수요자의 희망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수요자 얘기만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조중심의 논쟁과 개발문제를 어떻게 조화시켜서 균형을 이룰 것이냐 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임원혁 박사께서 발표할 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11월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

SESSION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G20 정상회의의 개발의제

한국의 경제발전과 Knowledge Sharing Program:
개발경험 공유를 위한 G20 공조방안
임 원 혁 KDI 정책연구실장

한국의 대외개발 협력정책과 G20 정상회의 Agenda
허 장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

한국의 경제발전과 Knowledge Sharing Program: 개발경험 공유를 위한 G20 공조방안

임 원 혁
KDI 정책연구실장

1. 제안배경

가. 실용적 개발지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대

- 개발을 도모함에 있어 과거에 비해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지식, 특히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지식의 중요성이 증대
- 실제 개발경험에 기초하여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
 - 사유화, 자유화, 안정화를 근간으로 한 워싱턴 컨센서스가 와해
 -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지나치게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에 치중하고 무역이나 기반시설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대두
- 개도국도 시혜성 원조나 틀에 박힌 기술지원보다는 자국의 개발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정책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
 - 즉, 고기를 잡아주거나 고기 잡는 법을 일방적으로 가르쳐 달라는

-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효과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는 취지
- 선진국의 입장에서든 과거 자국의 개발경험을 일방적으로 전수하거나 천편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개도국 현지 여건에 맞춰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

나. 체계적인 개발경험 및 지식 공유 시스템 구축 필요

- 세계은행, OECD, UNDP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구축한 기존 이니셔티브 및 DB의 경우 접근성과 효과성에 한계
 - 세계은행: James Wolfensohn 총재 재임기간 중 Knowledge Bank를 지향하며 1996년 WBI를 통해 포괄적 지식공유 이니셔티브 발족
 - * Development Gateway, Global Development Learning Network, Global Development Network 등
 - OECD: CCNM(Center for Co-operation with Non-Members) 등을 통해 비회원국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지식을 공유
 - * Enhanced Engagement, Regional Approaches, Global Forum, Non-Member Participation, Policy Cooperation/Consultation
 - UNDP: SU-SSC(Special Unit for South-South Cooperation) 설치, Southern Development Knowledge Exchange 등 개발지식 공유와 효과성 증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지원
-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과 한국, 중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식공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 미비
 - 일본: ODA 현장에 발전경험 및 첨단기술 공유를 5대 원칙 중의 하나로 명시하고 정책자문보다는 협력대상국의 자체 역량을 점진적으로 제고하는 데 치중(예: JICA를 중심으로 베트남의 시장경제 전

- 환 연구, 태국의 지방자치단체 역량배양 사업 등을 추진)
- 중국: 남남협력 차원에서 인도 등과 정책경험 공유(Rajiv Kumar)

다. G20가 동 논의의 최적 포럼

- G20에는 최근, 비교적 단기간에 개발에 성공한 한국을 비롯하여 대다수가 성공적인 개발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개발경험 공유 가능
 - 선진국 및 신흥국으로 구성된 G20의 특성상 다양한 개발경험 및 지식 제공 가능(multiple paths to development)
- 특히, 자국 스스로 개발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신흥국이 다수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실용적 개발경험 및 지식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과의 현재진행적·미래지향적 정책논의 가능
 - 기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주도의 원조중심적 개발논의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자생력 증진에 초점을 맞춘 성장중심적 개발논의로 전환 가능
 -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자본시장의 구축 등 (비기축통화) 개도국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공감 형성이 용이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성장 등 미래지향적 개발의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도 가능

2. 한국의 경험 및 시사점

가. 한국의 개발 경험 분석

- 한국의 경우 민간 협력을 통한 비교우위의 발견과 제고(joint discovery and upgrading of comparative advantage)라는 관점에서 개발을 추진
 - ‘전산업의 수출화’와 ‘전국민의 과학화’라는 구호 아래 수출지향형 공업화(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및 인적자원개발을 추구
 - 정부는 민간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투자위험을 분담하면서 기본적으로 경쟁적인 국제시장에서의 실적이나 지금까지의 경영 실적에 기초하여 지원을 제공(Performance-Based Reward)
 - 세계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법·제도 및 기반시설(infrastructure)을 확충하며 산업·무역정책을 조율

-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가 와해되고 비대칭적인 자유화가 이뤄지면서 경제위기를 맞았으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며 경쟁압력을 제고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기를 기회로 활용
 - 정부의 암묵적 보증에 대한 기대는 남아있는 상황에서 투자에 대한 통제가 완화됨에 따라 비효율적인 투자가 발생했고, 감독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자유화가 진전되어 외환위기 발생
 -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거시정책을 운용하고, 기존의 산업기반과 유연한 환율정책을 결합하여 단기간에 위기를 극복
 - 비교적 자기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했고,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체제를 개선했으며,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역량을 배양

나. 한국의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 실제 경험에 기초한 고위급 지식 공유를 통해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
 - 한국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협력대상국의 현지 여건에 맞춰 정책 연구·자문·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협력대상국의 정책 수립과 법·제도 구축 및 기관 설립(institution building)을 지원하는 지식 집약적 개발협력사업
 - 실제 경제개발 성과 및 직접 경험에 기초하여 자문을 제공하므로 신뢰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용이

- 한국 개발경험의 체계화·모듈화 사업과 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문사업으로 구성
 - 개발경험 체계화 사업은 한국의 대표적인 정책사례를 체계화하여 정책의 형성 과정과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수출진흥정책, 개발연대 금융, 경제위기 극복 등)
 - 개발경험 모듈화 사업은 협력대상국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제도, 기구,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추진배경, 추진체계 및 방법, 세부내용, 성과평가, 시사점 순으로 모듈화하여 정책자문에 활용(예: KOTRA, KIST, 신용보증기금 등)
 - 정책자문사업은 서면수요조사 및 대상국 선정 → 사업기획 → 고위 인사 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 → 정책세미나 → 추가 조사 및 현지보고회 → 중간보고회 및 정책연수 → 고위 정책대화 및 최종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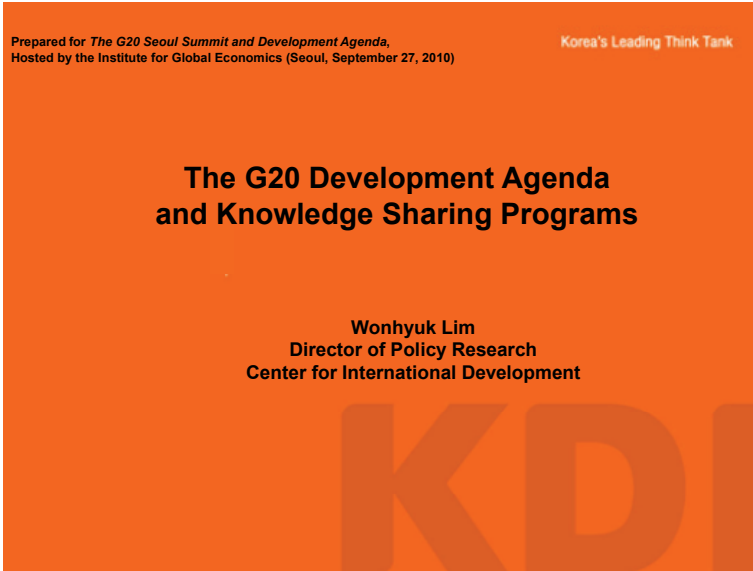
- 고회 순으로 진행(2004년부터 시작하여 2008~09년까지 13개국 83개 과제에 대한 컨설팅 완료, 2009~10년 11개국 대상 사업 추진 중)
-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와 연관된 유사원조를 제공하는 등 타 개발협력사업과 연계(KSP: 수출진흥 정책자문 → EDCF: 품질인증센터 등 수출진흥 기반시설 구축사업 지원)

3. G20 개발경험 및 지식 공유 이니셔티브(안)

- iPhone의 Application처럼 학습 및 개선이 가능한 수요-공급 매칭 메커니즘을 확립
- 조세, 농업, 무역, 전력, 인력훈련, 신용보강 분야 등을 우선 겨냥
-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G20 회원국과의 협력을 확보
 - 세계은행은 G20 국가별 제출자료와 IMF의 세계경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G20 정책이 개발 및 빈곤감축에 대해 갖는 함의를 분석하고, 개발과 글로벌 재균형(rebalancing) 간의 관계를 부각하는 연구를 진행 중

*** 부록 : The G20 Development Agenda and Knowledge Sharing Program**

<부록>



Contents		KDI
I. Introduction: The G20 and Development		
	What can development do for the G20?	
	What can the G20 do for development?	
II. Development Assistance Debate: What really works for development?		
	Aid Effectiveness: Paris Declaration and Beyond	
	Alternative Perspectives on Development	
	Multiple Paths to Development (e.g., East Asia's Development Experience)	
III. Development Approaches: Should the G20 try more of the same or something different?		
	Breakdown of the Washington Consensus	
	Aid-Centric and Growth-Centric Approache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Beyond 2015	
	The G20 Development Agenda	
IV.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Overview	
	Lessons from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History of KSP	
	Prospects for KSP	
	Appendix: KSP Country Consultation Projects	

The G20 and Development: Two Big Questions

◆ What can development do for the G20?

- ◆ Inclusiveness, beyond *ad hoc* outreach to non-members
- ◆ Issue expansion, beyond macro-financial issues: suitable for the (self-anointed) "premier forum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at leadership level
- ◆ Representativeness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legitimacy, as the G20 makes a transition from a crisis management committee to a global coordinating committee

◆ What can the G20 do for development?

- ◆ What really works for development?
 - ◆ Alternative perspectives on development
 - ◆ Multiple paths to development (e.g., East Asia's development experience)
- ◆ Should the G20 try more of the same or something different?
 - ◆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 Post-Washington Consensus Agenda
 - ◆ G8: Aid-Centric Development Agenda and Partnership with Africa
 - ◆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 Human Development, Economic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 ◆ How can the G20 deliver on its promises?
 - ◆ Funding and implementation mechanism
 - ◆ Executive agency: secretariat?


Development Assistance Debate

"Our generation's challenge is to help the poorest of the poor to escape the misery of extreme poverty so that they may begin their own ascent up the ladder of economic development.... Aid has received a bad press in recent years, but for utterly the wrong reasons. Aid is too little to solve the problems at hand, excessively directed toward the salaries of consultants from donor countries rather than investments in recipient countries." – Jeffrey Sachs (2005), *The End of Poverty: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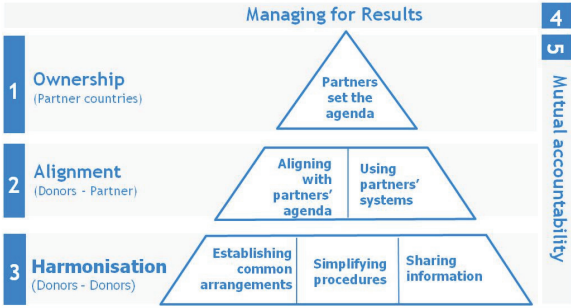
"Aid cannot achieve the end of poverty. Only homegrown development based on the dynamism of individuals and firms in free markets can do that." – William Easterly (2006), *The White Man's Burden: Why the West's efforts to aid the rest have done so much ill and so little good*

"The notion that aid can alleviate systemic poverty, and has done so, is a myth. Millions in Africa are poorer today because of aid; misery and poverty have not ended but have increased.... With aid's help, corruption fosters corruption, nations quickly descend into a vicious cycle of aid. Foreign aid props up corrupt governments—providing them with freely usable cash. These corrupt governments interfere with the rule of law, the establishment of transparent civil institutions and the protection of civil liberties, mak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in poor countries unattractive." – Dambisa Moyo (2009), *Dead Aid: Why Aid is Not Working and How there is a Better Way for Africa*

Aid Effectiveness: Paris Declaration of 2005




Managing for Res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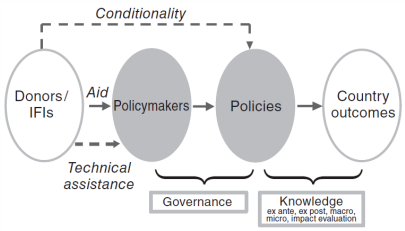


- Developing countries will exercise effective leadership over their development policies, strategies, and to coordinate development actions;
- Donor countries will base their overall support on receiving countrie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institutions, and procedures;
- Donor countries will work so that their actions are more harmonized, transparent, and collectively effective;
- All countries will manage resources and improve decision-making for results;
- Donor and developing countries pledge that they will be mutually accountable for development results.

Aid Effectiveness: Removing Flawed Assumptions and Staring into the Black Box



- We know what actions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Do we have sufficient empirical knowledge? Moreover, are conditionaliti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driven by knowledge alone?
- Our advice and money will make those correct actions happen: Are we aware of political economy and other factors that affect implementation?
- We know who "we" are.
 - William Easterly (2007), "Was Development Assistance a Mistake?"



– Francois Bourguignon & Mark Sundberg (2007), "Aid Effectiveness— Opening the Black Box"

Alternative Perspectives on Development



◆ Endowment Perspective: Framework Approach (Liberalization)

- Economies with “appropriate endowments” (cultural values, institutions, “investment climate”) grow. Those lacking such endowments do not.
 - Examples: Protestant ethic, common law, and colonial legacies
- The state should focus on getting the institutional framework right and then get out of the way. Release market forces and let individuals play the game.

◆ Evolutionary Perspective: Ingredients Approach (Capacity Building)

- Initiating growth does not require state-of-the-art institutions. The challenge is not so much getting growth to start by adopting big-bang reforms, as to sustain it by devising search networks to detect and mitigate constraints as they emerge.
- The reinforcement of successful experiments through the feedback mechanism of performance-based rewards can lead to dramatic changes over time.
- The state should facilitate growth by supplying the missing ingredients, which are often characterized by externalities. Progressively develop local capabilities.
- While a regime that facilitates resource mobilization can be effective in a catch-up phase of development, an institutional platform that fosters autonomy, diversity, and experiment is critical to sustained productivity-led growth.

Conceptual Framework for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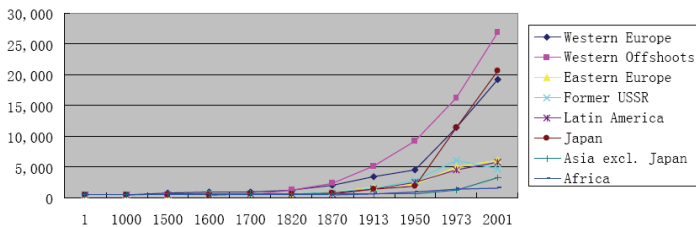


◆ “Development as Freedom”

◆ “Modern Growth” and Increasing Returns: Two Breakthroughs

- Emergence of a large group people who absorb and assimilate knowledge to improve their human capital and in turn use their improved human capital to apply and generate knowledge to raise productivity (Lucas 2009)
- Expansion of markets and hierarchies to facilitate specialization and coordinate productive activities, through the invisible hand (Smith 1776) and the visible hand (Chandler 1977)

Per Capita GDP of Various Regions (in 1990 international Geary-Khamis dollars)



Source: Maddison (2006: 642)

Conceptual Framework for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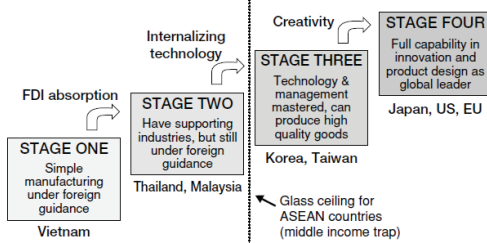
- ◆ **Development: Centrality of Innovation and Coordination Externalities**
 - Development is conceptualized as the result of synergies between enhanced human capital and new knowledge, involving complementary investments in physical and social capital. Innovation and coordination externalities are central.
 - The fundamental policy challenge is for the state to work with non-state actors and markets to address innovation and coordination externalities while minimizing negative government externalities (e.g., incompetence and corruption).
 - A solution to this challenge should include an incentive system that uses markets and institutions to provide rewards based on individuals' contributions to society in a competitive setting. Multiple solutions are possible.
- ◆ **Innovation**
 - Knowledge as a Public Good: Non-Excludability and Non-Rivalry
 - Knowledge as an Evolving Organism: Autonomy, Diversity, and Experiment
- ◆ **Coordination**
 - Transaction Costs and Complementarities
 - Capacity of the State, Non-State Actors, and Markets
- ◆ **Performance-Based Reward System**
 - Equality of Opportunity
 -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Conceptual Framework for Development



- ◆ **Respective Roles of the State, Non-State Actors, and Markets**
 - The development of markets reduces at least some of innovation and coordination externalities over time and facilitates specialization as well, and the importance of autonomy, diversity, and experiment in sustaining growth also places normative restrictions on the extent and mode of state intervention.
 - These restrictions should be shaped by three factors: 1) the development of markets to coordinate productive activities; 2) the level of state capacity (competence and integrity) to address externalities; and 3) the availability of non-state actors (e.g., business groups) to internalize externalities.
- ◆ **Dynamics and Transition**
 - As the capacity of the state, non-state actors, and markets changes over time, their respective roles and the normative restrictions on the extent and mode of state intervention should also change.
 - However, path dependence, involving historical and political economy factors, may affect this dynamics and create a problem of tran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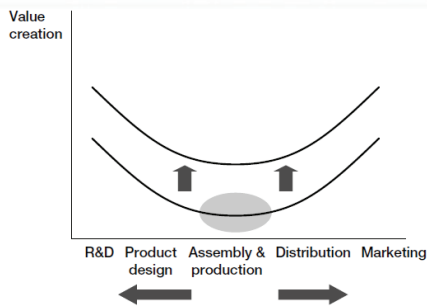
East Asian Experience: Generating and Sustaining Growth



Source: Ohno (2009: 8)

Basic education, health, and stability are important for generating growth. Integration into a regional or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 can facilitate further growth. However, to sustain growth and overcome the middle-income trap, a country must progressively develop its own capabilities to add value and respond to shocks. A country must address innovation and coordination externalities in technical/engineering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R&D, industrial clusters, and infrastructure. It should also strengthen prudential regulation and risk management before embarking on full-fledged capital-account liberalization.

East Asian Experience: Moving along and Shifting up the Value Chain



Source: Economic Planning Unit of the Prime Minister's Department, Malaysia (edited).

Many developing countries started out in the assembly & production segment of the value chain, using their comparative advantage in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e.g., textiles). Some have managed to move to higher value-added segments along the value chain (e.g., R&D and marketing) as well as shift up to higher value-added sectors (e.g., machinery & equipment). Others have not.

Breakdown of the Washington Consensus


- ◆ **Washington Consensus 1: Stabilize, Privatize, and Liberalize**
 - ◆ Skepticism from practitioners and scholars familiar with East Asia's economic development even at the height of triumphant neoliberalism
- ◆ **Washington Consensus 2: Get the Institutions Right**
 - ◆ "Picking Winners" in another guise?
 - ◆ Local context of institutional innovations
- ◆ **Disillusionment with the Washington Consensus**
 - ◆ Disappointing performance of "structural adjustment"
 - ◆ Low popular support as a rationale for aid giving
- ◆ **Search for a New Approach**
 - ◆ Institutional Fundamentalism
 - ◆ Human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MDGs
 - ◆ Bootstrapping Approach: New Light on East Asia's Experience

Differentiating the G20 and G8 Approaches to Development

Principle	G20 approach	G8 approach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Focus on growth	Focus on welfare/poverty
	Global structural transformation	Country structural adjustment
	Systemic risk management	Mitigate impact of shocks
Need for collective action	Coherent policies towards development	Focus on aid
	Model good practice	Define homogeneous standards
	Reduce free-riding through dialogue and common understanding	Enforce global rules
Tangible results	Implementation focus (templates/scorecards)	Announcements focus
	Common accountability framework	<i>Ad hoc</i> accountability mechanisms
	Significant legacy agenda	Fresh agenda each meeting
Legitimacy and Relevance to others	Global economic governance	G8 rules
	Middle income and low income development issues	Low income focus, especially Africa
	Involve regional organizations	Invite specific countries

Source: Kharas (2010)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0: 1990-2015)



Breakthroughs

- Recognition of Poverty
- Statement of Good Intentions
- Establishment of Global Partnership

Limitations

- Driven by Donors
- Focused on Basic Human Needs
- Insufficient to Generate Self-Sustaining Growth

Methodological Features

- Simplicity and Measurability
- Focus on Ends rather than Means
- No Regard for Different Initial Conditions
- Different Levels of Abstraction (Mixed Bag)

MDGs beyond 2015: Aid to End Aid?

- ◆ **New Baskets**
 - Basic and Process Freedoms: "Development as Freedom"
 - Inclusive Growth
 - "improved lives for slum dwellers" (Target 7.D)
 - access to finance
 - Infrastructure
 - ICT indicators (Target 8.F)
 - Electricity
 - Transportation
 - Industrial and Trade Development? (cf. World Bank: Knowledge Economy)
- ◆ **Consolidated Basket: Basic Health**
 - Child mortality (MDG 4)
 - Maternal health (MDG 5)
 - Diseases (MDG 6)
 - "Sustainable"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and basic sanitation (Target 7.C)
- ◆ **Enhanced Basket: Education**
 - Primary education (MDG 2): focus on quality and completion
 - Technical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World Bank Framework on Knowledge Economy



◆ WB Four Pillars of the Knowledge Economy

-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promotes the efficient creation, dissemination, and utilization of knowledge (public support vs. performance, IP protection, and meta-institutions) [1]
- **labor force** that continuously educates and upgrades itself [3]
- **information infrastructure** that facilitates the communication, dissemination, and processing of knowledge [4]
- **innovation system** of individuals, firms, academic and research institutions that effectively creates and assimilates knowledge [2]

Pillars	Indicators
Economic and institutional regi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 Regulatory quality • Rule of law
Education and skill of pop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ult literacy rate • Gross secondary enrollment rate • Gross tertiary enrollment rate
Information infrastru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ephones per 1,000 people • Computers per 1,000 people • Internet users per 1,000 people
Innovation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yalty payments and receipts (USD per person) • Technical articles per million people • Patents granted to nationals by the US PTO per million people

G20 Development Agenda:

Focus on Growth and Resilience



◆ Premier Marketplace for Development Paradigms

- The G20 consists of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and leading developing countries. Interaction between the two groups within the G20 is bound to lead to intellectually stimulating and influential discussion on what really works for development.

◆ Alignment with the G20 Framework

- The G20 development agenda is focused on promoting development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 Facilitating multi-polar growth helps to address global imbalances and may represent a win-win solution for the developing and developed worlds.

◆ Complementary and Differentiated Approach

- The G20 development agenda points to the importance of sustained economic growth in achieving human development.
- It emphasizes industrial, trade,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while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market institutions and human development.
- It recognizes the centrality of innovation and coordination externalities for development, and understands that multiple paths to development are possible.

G20 Development Agenda: Principles



Principles	Elements
Focus on Economic Growth	-Be economic growth-oriented and consistent with the G20 Framework.
Complementarity	-Differentiate from, yet complement, existing efforts. -Leverage comparative advantage. -Maximize value-added.
Outcome Orientation	-Avoid unrealistic aspirational commitments. -Concentrate on significant, achievable, and accountable measures.
Global/Regional Systemic Issues	-Center on global/regional systemic issues that call for collective/coordinated action.
Mutually Accountable Partnerships	-Engage low-income countries (LICs) as equal partners.
Private-Sector Orientation	-Promote private-sector involvement and innovation.

G20 Development Agenda: Key Pillars



Pillars	Major Elements
Infrastructure	-Data & Analysis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PI) -Regional (Cross-Border) Infrastructure
Human Resource Development	-Education Quality -Technical Education and Vocation Training
Trade (no substitute for the Doha Development Agenda)	-Aid for Trade -Duty Free / Quota Free
Private Investment & Job Creation	-Ease of Doing Business
Financial Inclusion	-Financing for Job Creation
Growth with Resilience & Food Security	-Insurance and Futures Markets -Agricultural Development
Governance	-Anti-Corruption -Tax Policy Reform
Knowledge Sharing	-Knowledge Sharing Platforms -South-South and Triangular Partnerships

G20 Development Agenda: Implementation



◆ Funding

- Outcome orientation: Avoid unrealistic aspirational commitments, and concentrate on significant, achievable, and accountable measures.
- No real discussion yet of resource commitments

◆ Partners

- Mutually accountable partnership: Engage LICs as equal partners.
- Private-sector orientation: Promote private sector involvement and innovation.
- No real discussion yet of consultation mechanism

◆ Executive Agency: Secretariat (not just for the development agenda)

- Leadership by the G20 Chair: Sherpa as the Secretary-General
- Troika-based staggered secondments (for 3 years each)
- Merit-based technical and support staff (recruited regardless of nationality)
- Cooperation with specializ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B, IMF, ILO, etc.)
- Permanent location: institutional memory for the diverse members of the G20
- No agreement yet on its establishment (cf. Sarkozy (Aug. 25,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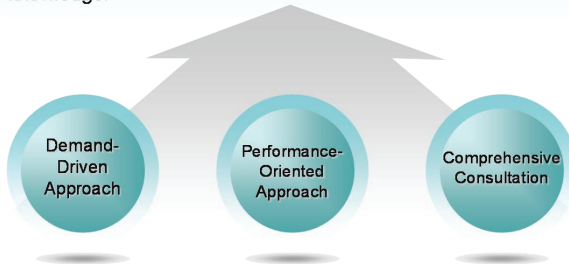
The G20 must establish an effective implementation mechanism and link its development agenda to the revision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f it is to enhance its representativeness and effectiveness legitimacy through development.

Overview: Knowledge Sharing Program

(www.ksp.go.kr)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launched in 2004, is a demand-driven and performance-oriented comprehensive consultation program designed to assist development partner countries in key policy areas by sharing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and knowledge.



Background



Knowledge for Development

- Knowledge is key to development.
- Recognizing thi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gencies have been implementing knowledge-sharing and management programs.
 - OECD: "Knowledge-based Economy"
 - World Bank: "Global Knowledge Partnership"
 - Asian Development Bank: "Knowledge Management Framework"


Korea's Remarkable Development Experience: Track Record and Empathy

- "Rapid, shared growth" [World Bank(1993)]
- GNP per capita: US\$ 82 in 1961 → US\$ 20,000 in 2006
- Transformation from an aid recipient to an aid donor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Development Consulting: Major El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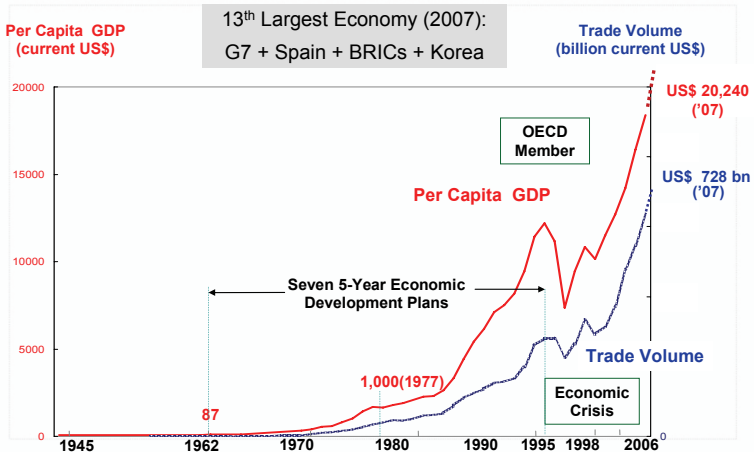
- ◆ **Institutional architecture and modality**
 - Can the 2005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serve as a useful guide? For example, how realistic is "ownership" for partner countries when donors have to be accountable to their voters? Wouldn't "partnership" work better? How would donors harmonize their actions when they have different development paradigms and conflicting interests?
 - In designing institutional architecture, how should we account for political economy factors in donor and partner countries as well as between them?
 - Does the combination of "ownership" and "performance-based reward" work for development consulting? (cf. asymmetric information and conditionalities)
- ◆ **Selection of partner countries**
 - Should we target poor countries *per se* or developing countries "with potential" (will to develop, responsive governance, income-education gap, etc.)?
 - Should we balance cosmopolitan development objectives with national economic interests, to facilitate public support for ODA?
- ◆ **Selection of consultation topics**
 - How can we effectively identify policy demand? Are there unknown unknowns?

Development Consulting: Major Elements



- ◆ **Conduct of Research**
 - How do we combine local knowledge with comparative perspectives?
- ◆ **Content of policy advice: conceptual framework for consulting**
 - If the Washington Consensus has been found lacking as a framework for policy advice, what should replace it?
- ◆ **Delivery and dissemination of policy advice**
 - How can we secure the attention from top decision-makers, opinion leaders, and the general public?
- ◆ **Linkage with other programs**
 - How do we back up policy consultation with material assistance?
 - How can we effectively harmonize with local and other international programs?
- ◆ **Evaluation and feedback**
 - How can the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consulting measured, evaluated, and improved?

Korea's Journey from Poverty to Prosperity: "The Face of Hope"



Lessons from Korea's Experience



◆ Compelling Vision and Leadership: Rapid, Shared Growth

- Vision that Imparts a Shared Sense of Purpose
- Broad-Based Growth: Beyond Enclaves and Dual Economy
- Appeal to Nationalism, Legitimation of Political Power Through Economic Modernization (after 1960 and 1961), Inter-Korean Competition
- Sustained Personal Attention from Top Leadership: Combination of Multi-Year Plans and Monthly Meetings

◆ Evolutionary Approach: Pragmatism and Feedback

- No Ready-Made Model to be Taken off the Textbook: "Big Push" / Import-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Taiwan's Export-Led Industrialization, Japan's Spillover Industry Promotion
- A blueprint (indicative plan) operates as a provisional goal which is constantly revised, based on an informed discussion of where the experiment in question is going.
- "We can make mistakes as long as we can correct mistakes. We can get feedback from the global market."

Lessons from Korea's Experience



◆ Big-Push Partnership: Information and Risk Sharing

- Information, Incentive, and Decision-Making Shared by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 Controlling Corruption and Rent-Seeking
- Developmental State: Autonomy from Particularistic Interests *and* Responsiveness to Popular Pressure
- Problem of Transition: Danger of De-Control without De-Protection

◆ Export Orientation: Market Test for Government Policy and Corporate Performance

- Less Prone to Political Influence and Manipulation: Reward Based on Performance in a Competitive Setting
- Exploiting Scale Economies and Overcoming the Limits of Domestic Market
- Learning by Exporting: Upgrading Mechanism

Lessons from Korea's Experience



- ◆ **Outward-Oriented, Bottom-up, Integrated Industrial Policy**
 - Go from downstream to upstream. Start with what you have. Exploit comparative advantage ("Big Push" through trade). Wait until domestic and export demand becomes large enough to justify the construction of optimal-scale plants. Insist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rom the outset.
 - Accumulate skills. Make a transition from imitation to innovation.
 - Set up public-private search networks to address emerging problems

- ◆ **Inward-Oriented, Top-down, Ad Hoc Industrial Policy**
 - Promote upstream industries with large spillovers ("Big Push" through coordinated domestic industrialization).
 - Go top-down. Disregard feedback.
 - Problem: Insufficient Demand, Suboptimal-Scale Plants, Higher Costs, Monumental Projects

Korea retained the ownership of its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acquired and assimilated foreign technology and know-how, and progressively developed its own capabilities, relying primarily on foreign debt rather than FDI.

Program Area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 Economic Planning System
- Public-Private Consultation
- Implementation/Feedback Mechanism

Industrialization and Export Promotion

-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Sector
- Promotion of Entrepreneurship
- Promotion of Exports

Knowledge-based Economy

- Support for R&D
- Innovation Clusters
- E-Government and IT Industry

Economic Crisis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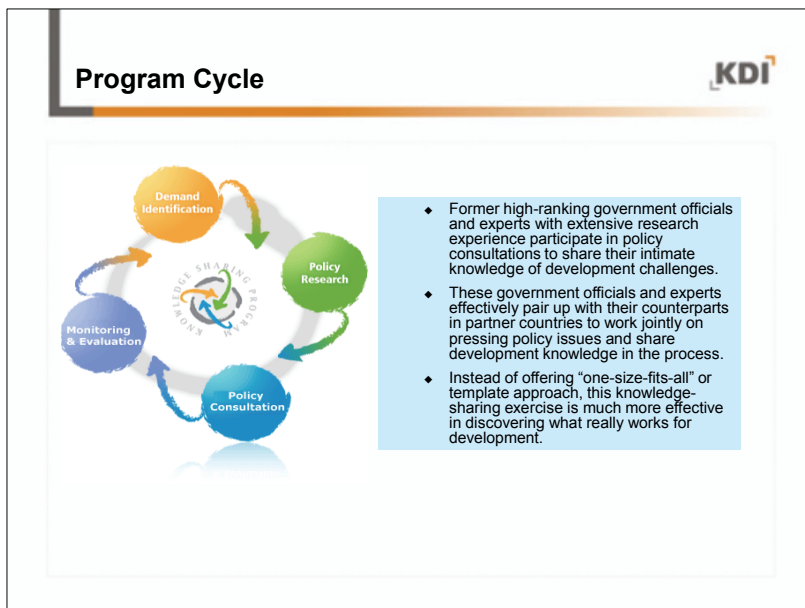
- Early Warning System
- Macroeconomic Stabilization
- Resolution of Nonperforming Loans
- Structural Reform

Human Resource Development

- Education
- Job Training
- Social Safety Net and Re-training



All issues in the field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s requested by the DPC, are considered.



History of KSP: Trial and Error



- ◆ **Unclear Focus of the Program: Knowledge Transfer or Knowledge Sharing?**
 - Early KSP projects focused on transferring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rather than addressing the policy needs of partner countries in their local context.
 - Customization was rather weak.
- ◆ **Unbalanced Composition of the Consulting Team: Generation and Country Mix**
 - Early KSP consulting teams mainly consisted of semi-retired senior researchers.
 - They did not work closely with local experts in partner countries.
- ◆ **Disconnect Between High-Level Policymakers and Experts**
 - Early KSP projects started out by sending high-level delegates to identify the policy priorities of partner countries, but these high-level delegates did not subsequently participate in the subsequent research and consulting phases.
- ◆ **Lack of Coordination with Other Cooperation Programs**
 - Few attempts were made to link KSP with EDCF and KOICA, and other programs under the fragmented structure of Korea's ODA.
- ◆ **Weak Infrastructure for Research/Consulting**
 - KSP lacked resources to set up a systematic database of major policies and case studies from Korea's own development experience.

History of KSP: Recent Innovations



- ◆ **Focus on Knowledge Sharing and Joint Problem-Solving**
- ◆ **Preliminary Demand Survey**
 - The selection of candidate countries is based on high-level diplomacy and KSP Index (GDP, Population, Political Stability, Education, etc.).
 - The demand survey response from candidate countries is to be made operational through subsequent face-to-face meetings.
 - A literature review of country profiles, 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and sectoral reports is conducted before these meetings.
- ◆ **Link Between High-Level Policymakers and Experts**
- ◆ **Coordination with Other ODA Programs**
- ◆ **Joint Program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ABCDE 2009 in Seoul
 - KDI-WB Conference on "Sharing Knowledge for Development"
- ◆ **Impact Evaluation**
 - An evaluation of KSP projects for the first five years shows that KSP has effectively contributed to policymaking and institution-building in partner countries, although methodological problems make it difficult to measure the impact on ultimate outcomes.
 - The recommendation for an integrated architecture for KSP has since been adopted.
- ◆ **Systemization and Modularization of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 ◆ **Strategic Development Partner Country (SDPC) Project**

Prospects for KSP



◆ G20 Summit and the Development Agenda

- The launching of the G20 summit, and Korea's chairmanship in 2010 in particular, provides a great opportunity to approach development issues from new directions.
- The G20 consists of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and leading developing countries, and interaction between the two groups within the G20 is bound to lead to intellectually stimulating and influential discussions on what really works for development: Washington consensus, human development paradigm (as encapsulated in the MDGs), new industrial policy approach, etc.
-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regard their own development as an achievement of the past and tend to take an aid-centric approach to development; whereas, leading developing countries see development as a policy challenge of the present for themselves as well as for others and adopt a growth-centric approach.

◆ Sharing Knowledge for Development on Global Scale

- It would be desirable to establish a network of officials and experts with an intimate knowledge of development challenges and an interactive platform to share knowledge for development.

Appendix: KSP Country Consultation Projects



Year	Country	Subject
2004	Vietnam	Major Policy Agenda and Policy Responses toward a Globalized Market Economy
	Uzbekistan	Industrial Development and Export Promotion Policy
2005	Turkey	A Way Forward for the Turkish Economy: Lessons from Korea's Experience
	Indonesia	Reforming Key Economic Institutions: Lessons from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2006	Cambodia	Strategic Framework for Fiscal Resource Mobilization and Life Insurance
	Algeria	Enhancing the Consumer Credit Marke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redit Card Market
2007	Kuwait	Formulation of Long-Term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zerbaijan	WTO Accession Strategies
	Ghana	Building the Basis of SME Development for Sustained Economic Growth

Continued on next page

Appendix: KSP Country Consultation Projects



Year	Country	Subject
2008	Dominican Republic	Export Development for the Dominican Republic
	Oman	Crafting an Institutional Platform based o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Partnership for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Industries
	Ukraine	Formulation of Mid-term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zerbaijan	Follow-up Issues in Acces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WTO System
	Turkey	Models and Strategies for National Technology and Innovation Capacity Development

Continued on next page

Appendix: KSP Country Consultation Projects



Year	Country	Subject
2009	Vietnam	Establishment of Mid- and Long- Term Socio-Economic Development
	Uzbekistan	Development of Navoi Free Industrial Economic Zone
	Indonesia	Developing Policy Solutions for Four High Policy Priority Areas of the Indonesian Government: Financial Supervision, Capital Market Development, Medium-Term Expenditure Management, and Competition Policy
	Cambodia	Microfinance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Development
	Kazakhstan	Innovational Industrialization Plan
	Dominican Republic	Improving the Export Infrastructure and Electric Power System
	Ukraine	Achievement of Energy Efficiency and Introduction of Promising Technologies for the Use of Alternative and Renewable Energy
	Kuwait	Follow-Up Issues in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한국의 대외개발 협력정책과 G20 정상회의 Agenda

허 장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

앞에 분들이 G20에 관해 많은 설명을 했다. 그래서 나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방향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겠다. 근대적인 ODA라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전후 복구사업을 통해 지속되어 왔다. 선진국의 ODA 정책방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정치, 경제, 역사적 배경과 함께 구축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이 세계경찰역할을 한 경우에는 약간 전략적 고려가 가미된 패권유지적인 투자로서 ODA란 연구가 많고 개발보다는 주로 외교적 목적, 식민지 관리가 앞섰던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스타일도 있고, 현재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주로 강조하고 있는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북극 유럽국가 쪽이 GNI와 ODA 비율이 가장 높다(1%). 이런 나라들이 주로 인권증시, 거버넌스(governance), 반부패 등과 같은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최근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국가들은 외교적 목적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ODA는 1987년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991년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가 설립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금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입과 함께 향후 ODA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각국이 정치, 경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 다양한 ODA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같은 신흥공여국이 어떤 정책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고 수원국에도 최대한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다. 발표순서는 간단히 한국의 ODA 현황, 한국 ODA 정책방향, 국제개발협력논의와 G20 개발의제 순이며, G20 쪽은 이미 많은 말씀하셨으므로 간략히 언급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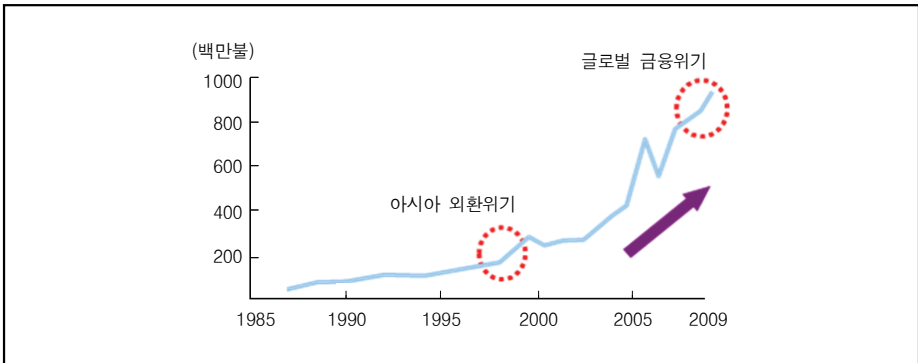
한국은 1945년부터 99년간의 국제기구 선진국으로부터 약 130억 불을 수원을 했다. 여기서 130억 불이란 것은 일종의 OECD DAC 기준으로 증여율(Grant Element) 기준이 25% 이상 되는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국제기구로부터 들어온 개발차관은 제외된다. 국제기구 차관까지 더하면 약 331억불 정도가 된다. 조운제 교수의 논문 “대외여건과 한국경제발전”을 인용하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베트남 다음으로 대외원조를 가장 많이 받았다. 1940~1978년까지 126억 불 정도를 받았다. 한국이 받은 경제 원조 60억 불은 같은 기간 중 전체 아프리카 69억 불, 남미 149억 불과 비교해볼 때 굉장히 커다란 양이었다. 이러한 우리의 ODA는 우리 자본이 부족했을 때 자립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 인프라 구축에 주로 투입되어 현재 세계 제10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가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는 소위 종자돈(seed money) 역할을 했는데 특히, 일본이 제공한 차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포철 같은 자본재 구축에 투입되었으며, 미국으로부터의 무상 원조는 소비재 쪽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우리가 사실상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 1987년 양허성 차관도입과 1991년 증여성 원조를 도입하고부터이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본격적 2010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지금 OECD 회원국이 30개국 있는데 그 중 23개국이 DAC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다. EC까지 포함해서 24개국으로 되어있다.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일반적인 국제기구의 차관이라는 것은 일반 Libor에 일부 행정비용을 보태서 주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제기구가 밀지고 주지는 않다. 그런데 양허성 차관이라는 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금리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OECD 기준에 의하면 ODA가 되려면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25% 이상이 되어야 양허성 차관이 된다.

<한국의 OD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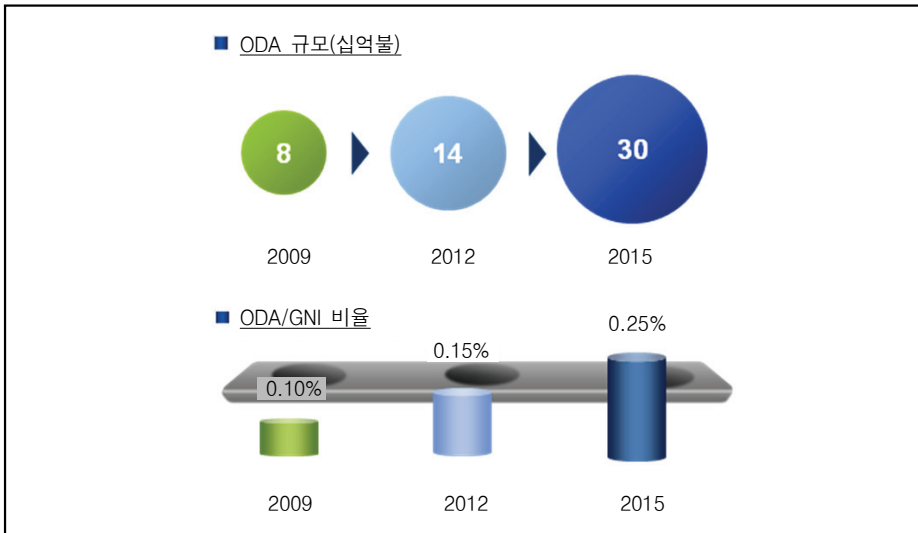
간단히 우리나라 ODA 현황 및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최근까지 빠르게 증가해왔다.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1987년 2천만 불에서 2009년 8천2억 불까지 증가해 왔다. 2010년에 10억 불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1).

<그림 1> ODA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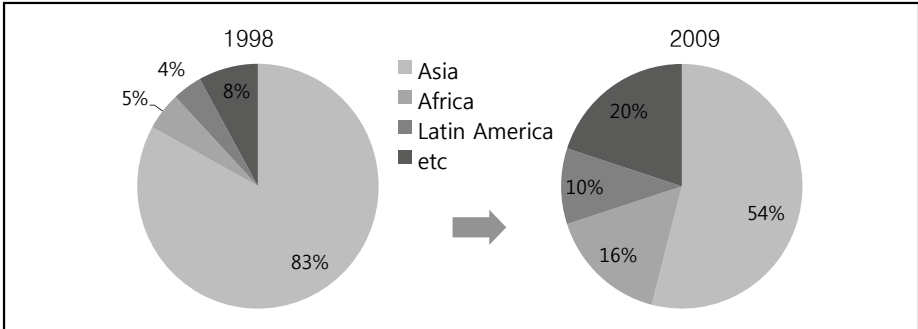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ODA 확대 계획을 보면 향후 성장률, 환율, 물가가정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2009년에 8억 불에서 2015년에 30억 불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GNI대비 ODA 비율 목표는 2015년 0.25%로 현재 OECD DAC 평균인 0.3%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수준은 GNI대비 0.7% 이상이나, 현재 OECD DAC 국가들 중에서도 5개국만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그림 2).

<그림 2> ODA 확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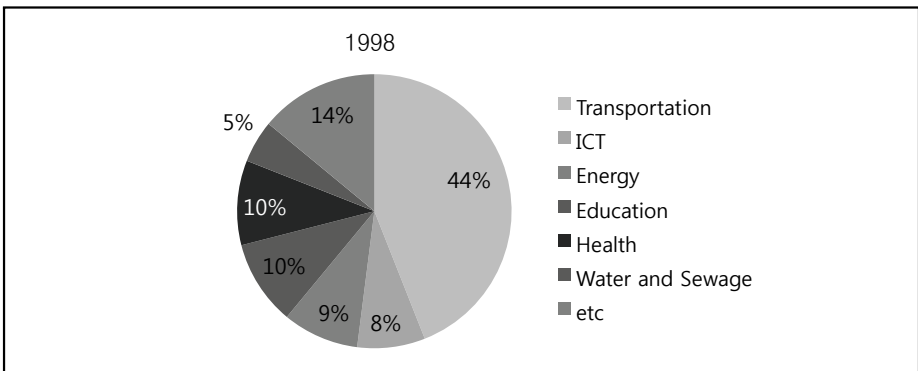
다음으로 구체적인 ODA 현황을 보면 지역별, 분야별 현황에서 우리나라 ODA의 주요지원 대상국은 아시아국가들이다. 주로 지리적 근접성과 높은 경제협력 잠재력 등으로서 동남아가 60~7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프리카 중남미 쪽으로 지원대상을 다변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림 3).

<그림 3> 지역별 지원 현황



분야별 지원을 보면 양허성 차관 같은 경우 경제분야 인프라를 중점 지원하고, 무상원조는 사회분야 인프라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특히 양허성 차관은 3천만 불 이상의 큰 프로젝트가 많고, 무상원조는 천만 불 이하의 작은 프로젝트들이 중심이다(그림 4).

<그림 4> 분야별 지원 현황



현재 한국의 ODA 추진체계는 기획재정부의 EDCF를 수출입은행에 위탁해서 수출입은행에서 주로 양허성 차관, 소위 유상 ODA를 하고 있고, 외교통상부 쪽에서는 KOICA을 중심으로 무상원조를 하는데. 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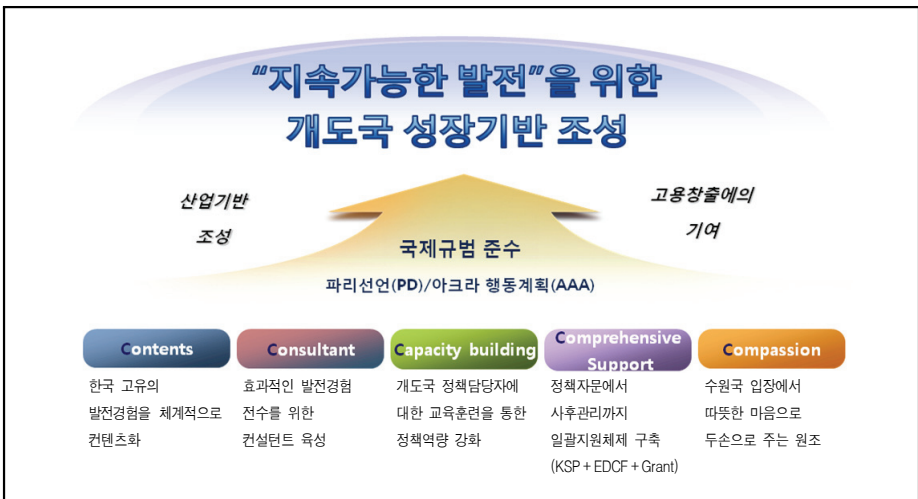
원조는 외교통상부뿐 아니라 각 부처에서 경제협력사업 형태로 소규모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는 무상협력으로서는 방금 임원혁 박사께서 언급한 경제발전경우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이 있다.

우리나라의 ODA 추진체계는 2010년 7월 26일에 ODA 기본법 발효에 따라 법적으로 정비된 것으로 우선은 각 부처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ODA 정책을 필요한 경우 종합 조정해나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스타일은 일본과 비슷한데 다만 일본은 JICA에 양허성 차관과 무상원조를 통합하였는데 사실상 지붕만 합친 형태이며, 운영은 별개로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ODA 정책방향>

향후 ODA를 실시함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할 점은 단순하게 원조를

<그림 5>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내부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을 크게 5C의 형태로 정리해 보았다. 이를 통해 개도국의 산업기반 조성,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ODA 실시 과정에서 파리선언, 아크라 행동계획(AAA) 등 국제적 규범도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5).

먼저, ODA를 위한 Contents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우리의 Contents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Consultant 육성이 필요하며, 개도국들이 우리의 원조를 자국의 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Capacity building)하는 게 필요하다. 이 세 가지 내용은 앞서 말씀 드린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연관성이 크다. 4번째로는 일괄적인 지원체제(Comprehensive Support)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KSP 등 정책자문 사업으로 사회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그 계획 내에서 포함되어 있는 병원이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양허성 차관(EDCF)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인프라 구축 후에는 병원에 대한 의약품 제공,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무상원조를 통해 지원해주고 추후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병원과, NGO 등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 연결시켜 줄 수 있다. 임원혁 박사께서 언급했듯이 도미니카 같은 경우가 그렇다. KSP로 도미니카 공화국에 수출진흥정책에 대한 정책컨설팅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무역협회 설립,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등 후속사업이 발굴되었고 이를 EDCF를 통해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ODA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으로 원조를 제공(Compassion)하는 것이다. 원조는 결국 받는 쪽의 입장이 중요하므로 개

도국에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어야 하며 원조 과정에서도 동료입장에서 도와주고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demand responsive와 knowledge oriented된 ODA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KSP의 경우에도 우리 발전경험을 단순히 소개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우리의 발전경험을 개도국의 실제 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localization하여 개도국 상황을 고려한 정책자문을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과거 외환, 경제위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정책들이 똑같이 개도국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시대적 배경에서 이미 시의성을 잃은 정책들도 있을 수 있으며, 새롭고 적용 가능한(adaptable) 형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정책자문을 위한 연구진을 구성하고 개도국의 의견수렴을 통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왜 KSP를 통한 한국발전모델 활용이 중요한 것일까?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global economic crisis)에 따라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변되는 서구 선진국 발전모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아시아 개도국 발전모델, 특히 중국, 한국, 인도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인도는 워낙 대국이므로 개도국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발전모델이 가장 적용가능성이 높은 모델로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의 발전모델은 식민지배와 내전경험을 극복하고 한 세대 만에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는 측면에서 개도국 발전의지를 고취시키는 데 충분하다. 또한, 개도국과 유사하게 열악한 초기여건에 시작한 측면에서 개도국에 대한 적합성도 높은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선

의의 협력이 가능하다. 여타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개도국에 대한 패권적인 인식이 낮으므로 개도국 입장에서도 우리의 모델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발전경험을 개도국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먼저 체계화된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재정부는 우리 발전경험 중 개도국에 적용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정책사례를 선정하여 정책배경, 정책내용, 정책집행, 성과 등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KSP 모듈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KSP 모듈화 사업을 통해 2012년까지 100개 사례에 대해 정리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우수한 컨설턴트를 육성하는 것이다. 과거 국제기구 종사자, 정책입안자 등을 중심으로 우수 컨설턴트 Pool도 만들고 국제대학원 등에 개발협력 전문가 과정도 신설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민간 컨설팅회사의 참여 확대를 통해 시장을 육성하는 것으로 개발 컨설팅산업 육성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 Capacity building은 개도국 인사들을 초청해 필요한 정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 기업 등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omprehensive Support와 Compassion(두 손으로 주는 따뜻한 원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 드린 사항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국제개발협력 논의와 G20 개발의제 문제인데 사실 앞에서 많이들 설명했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다. 최근 OECD, UN 등 국제사회의 개발 논의의 패러다임은 원조 자체의 효과 개선에 집중했던

지난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 논의에서, 개도국의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하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논의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도국 개발을 위한 재원도 단순히 공여국 중심의 ODA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민간부문을 활용한 다양한 재원들이 논의되고 있다. 수출을 통한 재원확보, 외국인 투자 유입, 외국인 근로자들의 본국 송금, 조세제도 개혁 등을 통한 개도국 국내 재원 활성화 등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겠다.

G20 개발의제도 개도국의 경제성장 중심의 논의, 즉,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빈곤퇴치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 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토론

이 계 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임원혁 박사의 발표내용은 상당히 광범위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G20 서울정상회의와 개발문제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개발이론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지만 박사학위 과정에서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많은 이론을 설명하였다. 또 동아시아 개발의 특성을 언급하고, MDG가 개발관점에서 볼 때 가지는 미비한 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또 그러한 보완을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허장 과장은 KSP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에 관해서도 소개하였다. 우리가 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나 KSP가 G20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다는 언급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과제를 G20 정상들이 회담에서 이틀 동안 다룰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 개발의제만이 아니라 다른 의제가 많은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발문제를 의제에 넣어서 정상들이 효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방법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상들이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앞서서 개발이론을 얘기할 것도 아니고, 또 정상들을 얹혀놓고 개발이론에 대하여 강의할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얘기를 하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므로

우리가 이 기회를 활용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미 4번이나 개최되었던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만 열리고 말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열릴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제를 준비해야 한다. 또 G20 정상회의가 서울회의를 끝으로 역사적 유물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서울회의에서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임원혁 박사와 허장 과장으로부터 전수받은 많은 정보를 실용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표를 만들었다. 임원혁 박사는 G8과 G20에 관한 호미 카라스의 표를 설명했는데 나는 좀 더 간략히 만들어 봤다. 먼저, G8과 G20은 참여국이 다르다. G8은 8개 나라들이고, G20은 EU를 포함해서 20개국인 것이다. G8만 모일 때는 세계GDP의 56%, 세계무역량의 41% 및 인구의 13%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G8

<표 1> G8과 G20의 비교

특징	G8	G20
참가국	G8 선진국 (고소득국)	G20 G8 + 12개 중진국, 첨단개도국, 또는 중진국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 생산액 - 교역액 - 인 구	- 56% - 41% - 13%	- 85% - 80% - 70%
주 제	세계경제의 안정과 성장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접근법	정책에 관한 협의	정책과 행동에 대한 협력
초 점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안정 빈곤감축 (MDG)과 재원조달	금융위기 극복대책 추후의 금융위기 방지대책
개발주제에 대한 접근법	저소득국의 빈곤감축 (MDG)	? - 중진국의 역할 추가

이 모여서 세계경제질서를 논의하는데 대하여 다른 나라들이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G20은 G8외에 12개의 선도 개도국 또는 신흥 산업국이나 중진국들이 같이 참가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되면 G20 회원국은 전세계 GDP의 85%를 차지하고 전세계의 무역량의 80%, 인구의 70%를 차지하게 된다. 문자 그대로 세계경제를 논의할 수 있는 나라들이 다 모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G8과 G20의 차이는 의제이다. G20에서 가장 급한 일은 이창용 단장이 이미 언급했지만 금융시장위기와 세계경제위기가 2007년부터 온 것을 어떻게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마무리하는가를 논의하는 것이다. 그러한 위기를 논의하는데 G8만으로서는 그 효과를 볼 수 없으니, 12개의 중진국들도 포함해서 같이 얘기해야만 전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G20으로 확대된 것이다. G8의 의제가 정상적인 경제안정과 성장을 논의하는 것이 주였지만 G20에서는 위기관리가 주안점이다. 우리가 G8의제의 포커스를 보면 경제성장과 안정이라고 되어있지만 G8만으로는 성장과 안정을 이룰 수 없고, 그것을 위해서는 개도국들을 발전시켜야 총수요도 유발할 수 있고 같이 번영해 갈 수 있다고 해서 개도국의 발전에 대해서 G8에서도 논의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이고, 이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하여 원조를 늘리자고도 했다. G20에서 처음 개발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G8에서도 개발은 상당히 논의되고 있었다.

그러면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을 논의한다면 G8의 개발논의와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를 주목해야 한다. 임원혁 박사, 허장 과장의 말은 과거 G8의 개발이란 것이 빈곤축소에 너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넓혀서 개발의제를 만들자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임

박사 말대로 왜 우리가 G20에서 개발을 논의하고 어떻게 개발의제를 확대해야 될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임 박사의 두 가지 논의인 우리가 왜 개발을 논의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개발의제에 접근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중에서 임 박사는 접근에 비중을 많이 둔 것 같다.

개발의제에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우리가 G20에서 개발을 논의해야 할 것 인가를 깊이 생각해야만 어떻게 개발의제를 정의하고 논할 것 인가하는 답이 나올 것 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에 관한 답부터 먼저 논의하는 접근방식에는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7년, 2008년 금융위기가 오고 난 뒤 G8나라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고 G20도 대책을 논의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이 어떻게 진전하고 있는가를 체크하고 논의하는 것이 G20의 지금까지의 주된 논의였다. 그럴 경우 위기관리가 끝나고 나면 G20은 필요 없고 G8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 G20에서 한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몇 나라는 빠져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 멕시코도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캐나다, 미국 이외에 북미가 너무 많이 대표되고 있다고 한다. 코리아, 아르헨티나는 G8과 함께 어깨를 겨룰 만한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G20 참가국이 너무 많다고 한다.

따라서 서울 G20 정상회의에 두 개의 큰 적합성 문제가 있다. 적합성(legitimacy)의 첫 번째는 대표성 문제(representative legitimacy)이다. 지금 G20 참가국들이 전세계를 잘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세계 문제를 논의하려면 다른 중진국도 들어와야 하고 특히 개도국 대표도 들어와서 세계 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 지역적으로 너무 적게 대표되는 나라들도 많고, 예컨대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러한데, 남아프리카 한 나라만

참가국이다. 또 어떤 지역은 너무 많이 대표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유럽국가들이다. 그래서 G20의 구성이 대표성 없는 약점이 있다. 그럼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효과성(effectiveness legitimacy)이 없다는 것이다. 8개 나라들이 모여서 합의하는 것도 어려운데, 20개의 나라가 모이면 더 합의가 어렵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효과성이 떨어지는데 왜, 무엇 때문에 12개국을 추가로 불렀는가? 그 이유를 깊이 새겨야 하고, 개발의제를 정하고 논의하는데도 그 이유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2개국이 들어왔으면 의제를 정할 때나 논의할 때에 12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어떤 추가적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개발의제를 생각할 때에 추가된 12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개발의제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임 박사과 허 과장이 앞에서 언급한 여러 의제들을 이런 관점에서 재정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현재의 주된 의제는 위기관리이다. 위기관리는 조만간 sunset zone에 들어간다. 위기가 끝난 그 뒤에는 무엇을 논의 할 것인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의제를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2009년 정상회의에서 선언한 G8의 의제를 보면 세계 경제문제에 관해서 G20가 G8을 대체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G12 국가들이 들어와서 더 효과적으로 세계문제를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효과성이 충족되는 것이다. 그래서 G12국가를 들여놨더니 의제가 풍부해져서 시간 많이 걸리고 합의과정은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세계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결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새로운 멤버들 즉 중진국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점에서 개발의제를 봐야 될 것이다. 첫째는 부가가치가 있는 의제를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있는 의제를 확대하고 또 지속될 수 있는 의제를 개발해야 한다. 이미 발표한 임원혁 박사, 허장 과장의 의제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중진국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중진국들이 볼 것은 양쪽이다. 선진국과의 발전간격을 좁히고, 후진국도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계경제가 더욱 커지고 선진국과 개도국과 중진국이 다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개발의제는 **two-gap** 개발의제이다. **two-gap agenda**의 하나는 중진국이 선진국과의 발전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진국이 후진국과의 가진 발전격차를 줄여나가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중진국들이 주도해서 의제를 개발해야 하고, 이 개발된 의제는 **G20**이 가지는 두 가지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첫째는 대표성이고, 둘째는 효과성을 보완해야 한다. 그럼 **two-gap** 개발의제가 어떻게 이러한 적합성 약점을 보완할 것인가? 첫 번째는 저소득국가와의 발전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중진국들과 저소득국가들을 보고, 중진국이 다른 개도국들로 하여금 더 발전해가고 동반성장해갈 수 있도록 협력하지 않으면 안될 의제를 개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중진국도 선진국과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G20**이 그러한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미 많은 학자들은 중진국과 선진국의 경제가 수렴(**convergence**)되고 있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경제성장률이 낮는데 반하여, 중진국들은 성장률이 더 높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선진국과 중진국의 발전격차가 좁아져 갈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 인도, 한국은 선진국보다도 경제성장의 속도가 빨라서 경제성

장에서 선진국들을 따라잡아 궁극적으로는 경제수준이 비슷해지고 서로 융합해서 발전해 갈 것이라는 이론이다. 이미 1990년대부터 많은 학자들이 경험적 실증적 연구를 통해 상반된 증거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수렴이론이 이미 확인된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우리가 G20 개발의제를 정할 때는 이 두 발전사이의 격차를 다같이 취급할 수 있는 의제를 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얘기한 G8의 의제는 주로 후진국과의 발전격차 축소에 중점을 둔 것 같다. 중진국들도 G20의 기회를 활용하여 수렴격차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two-gap 개발의제를 얘기할 것인가? 어떻게 two-gap agenda를 실제로 작성하고 논의할 것인가 하는 운용측면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G20국가들은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회의를 하게 된다. G20은 이러한 준비회의를 통하여 다양한 성공 스토리와 최상의 관례 또는 모범사례를 서로 전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오늘 임 박사 와 허 과장 모두가 한국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를 많이 언급했는데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KSP를 얘기하려고 다른 정상이 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한국 이야기를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겸손해야 하고, 그에 관한 언급을 자제해야지 손님 불러놓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좋아할 손님은 아무도 없다. 손님이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이야기는 안 해도 다 안다. 주최국이 한국이니까 모든 나라 정상들이 한국에 대하여 공부를 많이 하고 오기 때문이다.

G20에서는 다른 나라 손님들이 자기들 자랑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G20참가국들이, 특히 12개의 선도 개도국들이, 자국의 발전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발전이라는 것은 모두가 한국식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발전경험이 있고, 그 나라의 부존자원과 사회경제적 사정에 따라 발전경로가 다르므로 복잡다양한 발전경험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중진국들은 한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이 발전한 경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고, 거기서 얻은 교훈을 다른 나라와 나눌 수도 있다. 또 임박사는 저소득 국가들도 스스로 독립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생적 경제발전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그런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벤치마킹할 사례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모아서 개도국들이 자국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발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도 발전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 이후 빈곤율이 20%대에서 8%로 줄어들었다. 어떻게 했냐 하면 경제성장률을 많이 높여서 한 것이 아니라, 빈한한 사람들에게 조건부 현금지급(t을 한 것이다.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물건을 준다면 *logistical procedure*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FAO가 식량을 가난한 나라에 나누어 주는데, 식량을 나누어 주는 비용이 식량가치의 평균 25%이다. 그럼 25%만큼 낭비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 브라질에서는 현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북한에 주듯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붙인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안 보내고, 보건소에 가서 건강체크도 안 하고 예방접종을 안 해서 국가의 교육·보건행정비가 늘어나니 자녀들을 학교에 매일 보내야 한다는 조건이다. 결석률에 따라 돈을 끊는다. 보건교육을 안 듣거나 예방주사를 안 맞으면 돈을 끊는 식으로 해서 현금을 지원한 것이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도 경제를 시장경제원칙에 따라서 자유화하고 개

방한 뒤 빈곤율이 60%대에서 20%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중국도 자랑할 것이 많은데 G20회의에서 한국 자랑만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중국은 조 건부 현금지급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분배를 많이 해서 빈곤율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하여 생산성 높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고용을 늘려서 빈곤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브라질이나 중국 두 나 라 모두 빈곤율이 많이 줄었지만, 꼭 같은 방식으로 줄은 것은 아니다. 브라질의 경우, 빈곤율은 많이 줄었지만 실업률은 아직도 높다. 중국도 빈곤율은 많이 줄었고 실업률도 줄었지만 소득분배지표는 더 나빠졌다. G20회의에 참가할 성공한 중진국들은 각각 자기들의 사정과 환경에 따 라서 다른 개발정책을 펴워서 중진국이 되었고, 선도 개도국이 되었으 며, 신흥산업국이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도도 1990년부터, 중국의 영 향을 받아서 경쟁심리가 발동되어서 그런지,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관치 경제와 보호무역에서 벗어나 시장경제를 확대하고 자유화하고 개방해서 많은 발전을 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인도가 중국보다 더 빨리 발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 안에 한국도 얘기해보시오 라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KSP를 얘 기하든지 다른 발전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G20 정상들이 서울회의에서 자랑하다가 하루 동안에 기존 의제와 새 의제를 모두 다룰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지역발전세미나 또는 회의를 조직하고, 개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G20 참가국 이 비(非)참가국을 독려하여 비공식적인 토론조합을 만들어야 할 것이 다. 표 2를 보면, G20회원국이 지역별로 대표하게 되어있다. 아프리카에 서는 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가 들어 있고 북아메리카에는 캐나다, 미국이 있고, 동아시아는 중국, 일본, 한국 등 각 지역별로 몇 개국이 대표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이 각

지역에서 주동이 되어서 조직하면 G20회의에 참가하지 못하는 나라들도 충분히 대표되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이 주도가 되어서 아시아의 많은 개도국들과 같이 개발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이 발전경험을 얘기하면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고 교훈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 나라들이 브라질의 조건부 현금지급이 이치에 맞다고 보고 자기들 나라에도 그런 것을 해 볼 용의가 있다고 나올 것이고, 한국이 수출주도적 경제개발을 해왔다면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자생적으로 느껴야 한다.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을 것이므로 지역개발회의를 조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서울 정상

〈표 2〉

지역	G20 회원국
Africa	South Africa
Latin America	Argentina
	Brazil
	Mexico
Northern America	Canada
	United States
East Asia	China
	Japan
	South Korea
South Asia	India
Southeast Asia	Indonesia
Western Asia	Saudi Arabia
Europe	European Union
	France
	Germany
	Italy
	Russia
	Turkey

회의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우리나라가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추후의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하고 권고할 개발의제를 마련하자고 얘기하면, 다음 정상회의를 할 때 이런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G20에 대한 한국의 공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지역회의는 반드시 G20 주최국이나 회원국이 직접 조직할 필요는 없다. G20 정상회의의 정식회원국은 아니지만 IMF 총재, 세계은행 총재, 유엔 사무총장, 지역개발은행 총재 등이 초청되어 오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각 지역별로 개발회의를 조직하여 여러 나라들이 발전경험을 공유하게 하면서, 개발의제에 대한 합의를 얻게 하고 합의된 권고를 G20 정상회의의 주최국에 전달하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럼 G20이 가지는 대표성 문제를 우리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어느 정도 상당히 심각한데 며칠 전 세계경제연구원에서 前 세계은행 부총재, IMF 부총재를 역임했던 Anne O. Krueger 박사를 모시고 세미나를 했는데 그 분이 이런 말을 했다. IMF는 180여개 국가들이 24개의 이사들을 배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큰 나라들은 독립된 이사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룹으로 뭉쳐서 하나의 이사를 선출하는데, 24개의 이사 중에서 5개의 이사가 대표하는 나라는 G20의 회원국에 의하여 대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나라로 바꾸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회의를 해서 G20에서 빠져있는 중진국들과 개도국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더라는 말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G20 정상회의에서 바쁜 정상들이 대부분 합의된 추천에 대해 좋은 의견이다라고 합의만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창용 단장이나 임원혁 박사 말대로 action program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정상들이 만드는 것은 아니다. 액션프로그램을 장관들 회의나 하위레벨 미팅에서 할 수 있도록 지휘만 하는 것이다. 정상들이 지역회의에서 합의되어서 추천된 발전원칙이나 사례들을 보고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한 후 그것을 구체화해서, 어떻게 선진국이 도와주고 중진국이 협력하고 개도국이 벤치마킹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할 것 인가하는 구체적 action program을 만들 수 있도록 지침을 주는 것이 G20 정상회의의 역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결론도 빨리 생각된다. 실제로 이런 action program 안에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논의된 요인들이 들어가 있다. 허 과장이 얘기한 원조도 들어갈 것이고, 그 중에서 한국의 원조가 그렇게 잘 되어 있으면 한국 원조의 어떤 점이 가이드라인에 넣자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무역이나 투자-특히, 인프라에 대한 투자-등 여러 가지 분야를 action program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G20 정상회의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액션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가이드라인이나 요소(factor)만 의제로 넣으면 좋지 않나 생각한다. 임원혁 박사와 허장 과장 두 분의 발표를 이러한 틀 속에 넣어서 이해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SESSION



(패널토론)

G20 정상회의와 개발의제

-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

김 정 수 중앙일보 경제전문기자

박 태 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 제 민 연세대 교수

전 승 훈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원장

정 병 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무역국제협력과장

[패널토론] G20 정상회의와 개발의제

-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

김 정 수
중앙일보 전문기자

요즘 보면 G20에 대한 공동인식이 상당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다. 위기를 극복한 나라들도 있고, 또 극복한 강도라든가 속도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심하게 표현해서 지금 이대로 가다간 최소한의 어떤 G20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G20 process의 존재감이 결정적으로 약화되거나 사라질 위험이 커질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G20의 여러 가지 의제 중에 우리가 주도해서 의제로 채택된 개발의제가 논의의 진척이 제일 더딘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소위 강하고 균형 잡힌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발 간에 현실적 연계성이 조금 떨어지고 실제로 글로벌 위기와 그로 인한 저성장에 의해 개발지원 자원(인적, 시간적, 재정적)의 제약 등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 그래서 G20회의 참여국 입장에서는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제금융기관을 통해서 무역과 관련 금융 확대를 넘어선, 새롭고 과감한 개발의제를 개발해서 추진할 동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개발의제에 관한 서울 G20회의에서 재정적 부담이 수반하지 않는, 선언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겠는가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까지 포함하여, G20를 어떻게 해서든 소위 글로벌 경

제문제에 대한 프리미엄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어하는 입장에서는, 서울회의를 통해서 뭔가 개발의제하고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나와야 되는 아주 어려운 의제인 것 같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개발의제와 관련하여서는 서울 G20회의에서 참여국들이 개별적으로 단기적인 부담이 따르지는 않지만 G20이 글로벌 의지의 결합체라면 의지표명이나 선언을 넘어선 향후에 G20가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개발의제와 관련된 서울 G20회의에서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개발의제의 정상들 간 합의를 기대하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기존의 개발지원체제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관련 국제기구의 진흥과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며, 거기에 재원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제우 교수가 지적한 바 있지만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기존의 선진국 외에 신흥국이 이런 국제기구의 재원 확대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가능하면 숫자로 못을 박아서 세계은행에 재원을 몇 천억, 몇 조 달러를 늘리겠다는 합의를 의제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G20 개발에 대한 기여체제의 확립을 G20 개발의제로 삼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action plan이 working group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제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working group을 G20 개발위원회 정도로 승격시킨다고 할까, 어떤 체제화의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다.

이 위원회의 목적이라고 하면, 개발에 관해서 G20이 구체적으로 기여

방안을 모색하고, 그런 기여를 체계화해 어떠한 식으로 기여하겠다는 것을 논의하는 상설개발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싶다. 이것의 기대효과는 물론 당연히 개발의제에 관해서 G20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G20 메커니즘을 체계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또는 중간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박 태 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나도 개발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다. G20은 이제 세계경제를 다루는 최상의 포럼이다. 한국이 이번 G20회의를 주최국이 되어 개최하면서 개발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 오늘 나온 많은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주최국이 기존의 제가 아닌 새로운 의제를 산정할 때는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최근 G20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기존의 제를 제대로 못 풀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상들이 하루 반 동안 회의를 하는 타이트한 스케줄을 고려하면 새로운 의제를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한편으로는 위기 이후에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도 의제를 확장해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은 G20이 국제경제협력력을 주관하는 새로운 지배구조체(governance body)로서 그 신뢰성(credibility)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 하던 일을 잘해서 신뢰를 얻자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세계경제 이슈를 더 광범위하게 관할해서 신뢰를 얻자는 그룹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전공하고 있는 국제무역에 관해서도, G20이 DDA 협상을 해결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DDA는 더 이상 진전될 가능성이 없으니 당분간은 DDA에 대해서 G20에서 다루지 말자는 의견이 있다. 즉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자꾸 하게 되면 오히려 G20의 신뢰성만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다른 각도에서 DDA가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핵심이슈를 들여다보면 G20의 핵심국가들 간의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DDA가 결론을 못보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DDA를 해결하지 못하면 G20의 신뢰성도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발의제를 만들어서 G20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173개국의 관심사항인 개발문제를 우리가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의제로 채택된 다음에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G20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역시 서울 G20 정상회의가 하루 반 동안 개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아마도 전체회의의 시간의 60~70%는 기존의제를 다루는 데 쓰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은 30~40%의 시간에 새 이슈들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11월 11일, 12일 전에 만약 세계경제가 불안해진다고 하면 기존의제에 대한 논의 비중이 커져서 새로운 의제를 시간적으로 다루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이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 짧은 시간에 정상들의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주시해야 할 점은 여태까지 개발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미 많은 기관이 개입되어 많은 재원을 썼는데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 이슈를 새롭게 다룰 때는 차별성이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정부가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등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네 번째 사항은 우리가 제안한 개발의제가 앞으로 다음 번 주최국인 프랑스와 멕시코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계속 이슈로 유지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창용 단장도 그렇고 G20 준비위원회에서도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개발의제가 완전히 새롭게 별개의 의제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제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위기 이후에 지속 가능하고 균형된 세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framework**를 찾자는 의제에 개발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연계고리가 될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 G20 준비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임원혁 박사도 발표했지만 8가지 분야의 개발의제를 내놓은 것은 일종의 나열식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느껴진다. 인프라, 인적개발, **trade facilitation**, 금융, 투자문제 등 많이 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 초점을 맞췄으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개도국의 무역을 좀 더 성장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인적자본 육성, 도로 등 인프라 구축 등이 무역 원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이나 수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는 것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8개의 필라 중 무역과 밀접한 필라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면 G20의 **framework** 의제와도 보완적인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김정수 기자도 이 의제가 굴러가려면 상설위원회가 만들어지

면 좋겠다고 지적했고, 임원혁 박사는 G20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G20이 개발의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개발에 관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놓은 기관이 없다 하더라도 세계은행, OECD, UNCTAD 등 기존의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정 국제기구에게 권한을 주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개발프로젝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내가 듣기로는 개도국의 인프라 지원 프로젝트가 어떤 경우엔 시작부터 끝까지 엉망이며 문제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 없이 새로운 어떤 개발프로젝트를 가지고 G20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에 대한 논의를 G20에서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다.

이 제 민
연세대 교수

서울 G20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경제발전에 대해 평소 생각하는 것과, 그것이 서울 G20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역사적으로 G20의 전신인 G7이 1970년대 중반에 생겼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헤게모니 하에 구축된 IMF-GATT체제가 1970년대 초반에 흔들리면서 미국의 헤게모니만으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일본 등 다른 선진국도 참가하는 G7이 생겼고, 그 후 냉전 종식으로 G8

이 되었다가, 이제 신흥공업국의 등장에 따라 G20이 되었다. G20이 너무 숫자가 많아서 유효한 기구가 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는 있겠지만, 개도국이 세계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는 추세는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개도국이 참여하더라도 그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는 것은 앞으로의 숙제다.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의제를 들고 나와 잘 정착시킨다면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개발의제라면 많은 사람이 우선 ODA를 떠올리는데, 그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견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다. William Easterly가 쓴 *The White Man's Burden*이라는 책을 보면, 2000년대 중반까지 선진국이 개도국에 준 원조액이 2조 3천억 달러라고 한다. 이렇게 많은 원조를 주고도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 원조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나도 역시 원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반면 무역은 개도국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즉, 개도국에게 공산품이나 서비스산업의 수출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성장을 돕는 중요한 방법이다. 한국도 바로 1960년대 초 “원조보다는 무역”이라는 선진국, 특히 미국의 개발의제의 흐름을 타고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수출이 성장에 대해 갖는 긍정적 효과를 두 가지만 들라면 이런 것이다. 첫째, 수출은 ‘근대화 효과’가 있다. 한국은 1960~1970년대 수출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변했다. 예컨대 “코리안 타임”이라는 현상이 없어진 것은 수출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수출은 ‘평등한 분배를 수반하는 성장’의 조건이 되었다. 단순노동집약적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일자리를 대거 만들고, 그것이 실업과 잠재실업을 급속히 줄임으로써 분배의 평등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효과는 흔히 생각하는

비교우위에 따른 분업의 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긍정적 효과다.

이와 같은 수출의 긍정적 효과는 그 후 한국을 모방한 후발국인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앞으로 더 후발국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질 것인지 여부인데, 이것과 G20의 개발의제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개도국이 무역을 통해 성장하려면 처음에 고회율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고회율은 수출 증대를 위해 필요하고, 수입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즉 경제발전 초기에는 비교역재에 비해 교역재의 생산을 늘리는 메커니즘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 같은 나라가 지금까지 고회율을 유지해 온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고 난 후에도 고회율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지금 중국보다 더 후발국이 노동집약적 제조업 제품을 수출할 길이 중국의 고회율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프리카 국가들도 5~7% 성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주로 중국에 원자재를 판 덕분인데, 그래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못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G20회의에서 환율 ‘졸업제도’를 논의해 보는 것이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고회율을 허용하지만, 발전수준이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허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의 환율 문제를 개발의제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졸업’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중국의 환율문제를 강대국 간의 단기적 힘겨루기가 아니라, 개도국의 경제발전 문제를 고려한 장기적 ‘제도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장기적 제도화로써 세계경제의 거버넌스 구

조를 개편하는 것이 G20회의의 원래 목적과도 부합한다.

한편 금융은 무역과 매우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이 주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것은 개도국의 입장에서도 남의 얘기가 아니다. 개도국의 입장에서 지난 40년간 선진국이 금융을 다루는 모습을 요약하자면 “시스템 관리를 잘 못하면서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식이었다. 특히 미국이 월가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그런 행동을 계속해 왔는데, 이번 위기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들한테 돌아간 측면이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를 가혹하게 처리하고 나니, 아시아국가들이 달려만 쫓고 투자를 안 한 것이 글로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현 위기의 한 조건이 된 것이다.

지난 40년간 IMF가 전세계 개도국을 다니면서 무조건 자본시장을 열라고 해왔다. Dani Rodrik의 계산에 의하면, 개도국이 단기자본시장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외화준비금의 금리와 자본의 기회비용 간의 차이가 개도국 GDP의 1% 정도로서, 이것은 개도국이 ODA로 받는 총액과 비슷하다고 한다. 그런 관점에서 IMF가 열게 했던 자본시장에 대해 각국이 자국 사정을 봐서 통제를 다시 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G20회의가 진정으로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장이 되려면, 과거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본통제를 허용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상대방이 워낙 강하면 어차피 안될테니 말도 하지 말자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예컨대 토빈세(Tobin tax) 같은 것도 어차피 안 될 테니 말도 안 하려는 것 아닌가. 그래도 말은

할 필요가 있다. 영국 같은 나라도 토빈세에 줄곧 반대해 왔지만 작년에 Gordon Brown 총리가 토빈세에 찬성한 적이 있다. 지금 선진국들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온갖 방법으로 세원을 발굴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인두세인 입국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토빈세같은 것은 논의도 말자는 식은 곤란하다.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계기로 이번 G20을 활용하지 못하란 법은 없다.

전 승 훈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이사장

본 세션의 과제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오전 세션의 G20 준비위원회 관계자 발표에 의하면 “성장(Growth)과 복원력(Resilience)”에 초점을 둔 개발의제가 채택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논의의 초점을 G20 주제에 대한 원점에서의 논의보다는 기왕에 채택될 개발의제의 타당성과 이의 구체적 실현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G20 개발의제 “성장과 복원력”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국내 의견이 찬·반으로 분명히 갈려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한 G20 개발의제 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한 쪽으로부터 위와 같은 G20 개발의제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이 제기되었었다. 그 요지는 ‘성장을 기반으로 한 개발은 과거 정부주도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독재로 이어지는 구시대로의 회귀적인 발상’이며 G20에서의 개발의제라면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권, 환경, 극빈층 배려 등 포괄적 개발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이번 G20 개발의제에 대한

비판은 대개 위와 같은 시민사회의 입장이거나, 아니면 위기관리에 기본 목적을 두고 있는 G20에서 개발을 다루는 UN 기구들, OECD, 국제금융 기구 등을 제쳐놓고 개발의제를 다루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게 된 역사적 대사를 눈앞에 두고 동 회의가 할 일에 대하여 국내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없어야 할 것이다.

G20 정상회의는 이 지구촌에 가장 영향력 있는 20개 국가 지도자들의 모임이다. 당연히 그 모임의 관심사는 지구촌 공동체의 지속적 안정과 번영에 관한 근본적인 과제로서 다른 기존의 다자협력체계나 국제협력 기구로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구촌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에 근본적인 과제로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가?

인류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 요소가 식량, 물, 에너지 및 기후이다. 이 네 가지가 이 지구촌 공동체에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선 식량을 보면, 그 공급의 불균형이 아주 심하다. 몇 주전 우리보다 땅덩어리가 8배나 넓고 강수량도 꽤 많은 인구 2천만 명의 모잠비크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난 사실이 아프리카의 식량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구촌 면적의 22%,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인구의 40%가 기아상태에 있다. 지금과 같이 기술발전이 빠른 시대에 동 지역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1인당 농업생산성이 꾸준히 감소해 왔다. 이 지역의 물과 에너지 공급도 사정은 비슷하며, 현재로서는 개선될 전망이 뚜렷하지 않다.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지난 반 세기 이상 개발원조의 주된 대상

으로 삼고 있는 지역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지구촌 인류의 상당 부분이 삶의 기본적인 수요가 결핍된 위기의 상황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이것은 마땅히 지구촌의 근본적 과제일 것이다. 또한,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본원적인 길을 모색하는 것은 G20 정상회의의 당연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식량생산 및 물과 에너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투자와 기술이 우선 요구되며, 그것이 성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G20 정상회의가 “성장과 복원력”에 초점을 둔 개발의제를 채택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G20 준비위원회는 이번 서울 정상회의가 말의 성찬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천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식량 문제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가들의 식량안보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녹색혁명의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식량안보가 심각한 아프리카에 있어서는 농업생산력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물 관리 및 기술영농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및 물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연구소에서 혁신적인 비전을 제안하고 있다. 개발의 처너지 아프리카는 에너지 공급체제에 있어서도 처너지이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체제가 성숙되어 있지 않은 여건에서 엄청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콩고민주공화국은 현재의 아프리카 전력수요의 3배를 공급할 수 있는 수력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케냐는 세계 최고의 지열자원, 나미비아는 태양광 발전의 최적지, 모잠비크와 탄자니아 등은 상당한 풍력 및 바이오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위의 재생가능한 에너지 공급의 불규칙성을 수요와 일치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적용하여, 전력이 남을 경우 해수담수화 기술을 통하여 물을 생산하고, 모자랄 때는 일반수요에 충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아프리카 지역의 고질적 제약요소인 물과 에너지 결핍 문제, 그리고 이와 연결된 식량과 기후변화가 일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선진국으로서도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 대한 거대한 시장을 접할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인류의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비전을 가질 수 있다.

사실 빈곤을 극복하는 일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경제사에서 빈곤국가로부터 고소득 선진국가를 실현한 예는 흔치 않다. 빈곤극복이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평등, 인권 등 이상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면서 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면 지구촌의 빈곤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성장을 한 축으로 하고, 평등, 인권, 성 차별, 환경, 취약계층 보호 등을 다른 한 축으로 하는 이분법적 접근방법에서, 후자가 더 인도주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빈곤극복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폭동마저 불사하고 있는 자에게 형평, 인권, 성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사치가 아닐까?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는 아마도 빈곤과 식민지 지배 등의 상황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선진국 시민사회로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극심한 빈곤을 피부로 경험한 국가의 시민사회라면 그들과 인식을 똑같이 나눌 수는 있지 않을까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G20 개발의제는 지구촌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용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아마도 빈곤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한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보다 활발한 논의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G20 개발의제

실현을 위한 노력이 큰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정 병 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무역국제협력과장

앞 세션에서 개발이슈 추진현황에 대해 상세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본인은 G20 차원에서 개발이슈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다.

개발문제는 G7, G8차원에서 계속 논의해왔는데 G20차원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수원국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했다. 특히, 수원국들이 성장위주 개발전략 추진을 요청하였음도 고려했다.

그래서 현재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구체적 행동계획을 무엇을 채택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미 7월에 워킹그룹회의를 한번 했었고, 그 전에 전화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주 목요일에도 워킹그룹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워킹그룹회의를 통해 개발분야 서울정상선언문에 포함될 내용과 구체적인 다년간 행동계획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 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 10월 세르파 회의논의를 거쳐 11월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채택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논의과정서 우리는 G20 회원국뿐 아니라 개발관련 국제기구를 기술자문그룹으로 참여시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이전의 G20 정상회의에서도 개발이슈가 논의되기

는 했으나 체계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G20 차원에서 개발의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패널들께서 개도국의 무역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하셨는데 서울정상회의에서는 무역역량 강화부분도 개도국 성장의 주요수단으로 논의를 해오고 있다.

질의·응답

질문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금융부문에서 잘못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세미나에서는 금융안전망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

질문 개발의제도 의제이지만 위안화 절상 문제가 상당히 긴급하다고 생각한다. 접근방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위안화 절상이 개발도상과정에서 필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에서 졸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현 상황에서 중국은 계속 저렇게 하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은 시장경제를 맡기고 해주면 중국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지속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환율문제를 제외하고 G20 정상회의를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개발의제 문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세계은행 재원을 어느 수준으로 한다든지 초점을 맞춰서 필라가 8개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한두 가지라도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상설화 문제는 현재 있는 각종 기구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상당히 큰 과제라 생각한다.

질문 앞서의 언급 중에 개발의제에 대한 의견 일치가 국내에서 시민사회나 NGO와도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부분에 공감한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병화 과장께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에 열리는 정상회의가 프랑스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에서 상당히 의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서울 정상회의 때 개발의제가 서로 상당히 의견일치를 가지려면 사전에 다음 개최국인 프랑스나 멕시코, 또는 이전 개최국이라든지 우리주변에 있는

중국, 일본의 의견 일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는가?

질문 내가 한국은행에서 국제기구 과장을 3년 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알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사무국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면 G20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설치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다음에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을 결정할 정도까지는 되야 G20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하나 정병화 과장께 궁금한 것이 무언가를 풀어놓아야 하는데, 주저하며 풀어놓지 못하고 있지만 워킹그룹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다. 알맹이 없이 우리 정부가 서울선언 같은 추상적인 것만 발표하고 끝난다면 G20회의의 의미는 별로 반감될 것 같다. 아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실무적으로 갖고 있다면 발표 못할 것 같다. 그러나 큰 의미에서 추상적으로나마 서울선언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알맹이를 터트리지 않으면 서울회의의 성공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에 국제백신연구소가 있다. 구체화되어서 사무소가 설치되고 세계 각국의 유명한 백신 박사들이 와 있는 것처럼 이런 구체적인 것을 정병화 과장과 국장들, 이상의 사람들이 꼭 해주길 부탁 드린다. 많은 내용의 공동커뮤니케이션에서 완전히 추상적인 것으로만 일관한다면 실망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회의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알맹이 있고, 아주 명료한 아이디어를 꼭 발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시민사회 관계를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한국 정부가 10월에 세르비아회의를 할 때 국제 시민사회와 대화모임을 갖기로 했다. 그래서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고, 국제 시민사회에서도 개발 쪽에 관심을 많이 보

여서 약 100명 정도가 모여 G20세르파와 함께 정책 간담회 등의 일이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한국 정부가 국제 시민사회와 대화를 한다면 좋은데, 개발과 관련해 국내에서 소통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20개 국가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좋은 얘기를 국내 시민사회의 많은 소통을 통해서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50%는 소통이 안 되어서 생긴 오해고, 50%는 기본적으로 보는 시각이 달라서 생긴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생산적으로 잘 활용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답변 금융안전망과 위안화 절상문제는 저의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답변 못 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채택되도록 추진 중이다. 그리고 워킹그룹회의 개최 전에 프랑스를 포함한 주요국과 사전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협조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시민사회와도 말씀처럼 대화의 채널을 유지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진행동향을 알려드리고 있다.

프로그램

- 주 제 : “G20 서울정상회의와 개발의제”
- 장 소 :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룸

2010. 9. 27. (월)

- 13:30-14:00 등 록
- 14:00-14:10 개 회 사
 남 중 현 세계경제연구원 원장
- 14:10-14:40 기 조 연 설
 이 창 용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 14:40-16:00 <제1세션>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G20 정상회의의 개발의제

사회 : 조 윤 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세계경제연구원 고문

주제발표 : ‘한국의 경제발전과 Knowledge Sharing Program:
개발경험 공유를 위한 G20 공조방안’
 임 원 혁 KDI 정책연구실장

 ‘한국의 대외개발 협력정책과 G20 정상회의 Agenda’
 주 형 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대참: 허 장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

토 론: 이 계 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6:00-16:15 휴 식

16:15-17:30 <제2세션> (패널토론)
G20 정상회의와 개발의제 -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사회 : 김 병 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서강대 명예교수

패널 : 김 정 수 중앙일보 경제전문기자

박 태 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 제 민 연세대 교수

전 승 훈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원장

권 해 룡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무역국제협력국장

(대참: 정 병 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무역국제협력과장)

부 록

《세계경제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1. Occasional Paper Series

00-01	한미관계: 현황 및 향후 전망	Stephen W. Bosworth
00-02	글로벌 뉴 이코노미: 도전과 한국의 활로	양 수 길
00-03	금융감독의 세계적 조류	이 용 근
00-04	성장하는 아시아와 침체 속의 일본	Kenneth S. Courtis
00-05	세계금융체제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Morris Goldstein
00-06	시애틀 이후의 WTO와 한·미 FTA 전망	Jeffrey Schott / 최인범
00-07	다자간 국제경제기구의 미래와 전망	Anne O. Krueger
00-08	남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	Marcus Noland
00-09	Knowledge 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Andrew Fraser
00-10	미국 新행정부 및 의회의 대외·경제 정책방향	C. Fred Bergsten
01-01	2001년 미국, 일본경제와 아시아	Kenneth S. Courtis
01-02	부시행정부의 對韓경제정책과 한국의 대응	Marcus Noland
01-03	3C를 극복하자	Jeffrey D. Jones
01-04	하이테크와 비즈니스, 그리고 세계경제	John Naisbitt
01-05	한국과 IMF	Stanley Fischer
01-06	한국경제의 향후 10년	Dominic Barton
01-07	세계 달러본위제도와 동아시아 환율딜레마	Ronald McKinnon
01-08	新국제질서 속의 유럽과 한국	Pierre Jacquet
02-01	금융위기 再發, 어떻게 막나. 칠레의 경험을 중심으로	Carlos Massad
02-02	세계경제의 기회와 위험	Martin Wolf
02-03	미·일 경제현황과 한국의 대응	Marcus Noland
02-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회복가능성과 위험	Allen Sinai

02-05	세계화: 혜택의 원동력	The Rt. Hon. Patricia Hewitt MP
02-06	9·11 테러사태 이후의 세계질서: 문명의 충돌인가?	Francis Fukuyama
02-07	아시아지역의 통화·금융 협력	Barry Eichengreen
02-08	세계경제, 회복되나?	Kenneth S. Courtis
02-09	미국 경제와 달러의 장래	Marcus Noland
02-10	도하라운드: 문제점과 전망	Jagdish Bhagwati
02-11	2003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전망	Paul F. Gruenwald
02-12	미국경제 현황과 세계경제의 앞날	John B. Taylor
02-13	9·11사태와 미국의 한반도 정책	Thomas C. Hubbard
02-14	미국 경제, 달러 및 대외통상정책 방향	C. Fred Bergsten
02-15	미국의 IT산업 관련 정책과 한국	Peter F. Cowhey
03-01	이라크전 이후의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Allen Sinai
03-02	OECD가 본 한국경제	Donald Johnston
03-03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새 역할	Charles Morrison
03-04	세계경제 전망과 부시행정부의 경기부양책	Phil Gramm
03-05	침체된 독일·유럽 경제가 주는 정책적 교훈과 시	Hans Tietmeyer
03-06	동아시아 금융협력과 한국	Eisuke Sakakibara
04-01	20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전망	Allen Sinai
04-02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Marcus Noland
04-03	미국 대통령선거와 韓·美·日관계	Hugh T. Potrick / Gerald Curtis
04-04	중국경제의 부상과 동북아 지역경제	Dominic Barton
05-01	대통령선거 이후의 미국 통상정책, 어떻게 되나?	Peter F. Cowhey
05-02	아시아 경제·무역환경, 어떻게 전개되나	Dominic Barton
05-03	2기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세계경제 및 시장 전망	Allen Sinai
05-04	일본의 시각에서 본 한국경제의 활로	Fukagawa Yukiko
05-05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보는 한국	Thomas Byrne
05-06	세계 속의 한국경제: 역할과 전망	Anne O. Krueger

05-07	중국과 인도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Wendy Dobson
05-08	동아시아와 아·태지역 경제통합	Robert Scollay
06-01	고유가와 세계경제의 앞날	Philip K. Verleger
06-02	2006년 미국경제/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Allen Sinai
06-03	한-미 FTA : 지속성장의 활로	Alexander Vershbow
06-04	일본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일 FTA	Oshima Shotaro
06-05	일본 경제회생과 한국경제	Fukagawa Yukiko
06-06	세계 M&A시장 현황과 전망 : 우리의 대응	Robert F. Bruner
07-01	한-미관계 : 새로운 동반자 시대를 지향하며	Edwin J. Feulner
07-02	통일 이후 독일 경제침체의 교훈	Juergen B. Donges
07-03	2007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Allen Sinai
07-04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ngel Gurria
07-05	동아시아 FTA 가능한가? : 중국의 시각	Zhang Yunling
07-06	구조적 변화 맞고 있는 세계석유시장과 한국	Fereidun Fesharaki
07-07	변모하는 세계경제와 한국	Anne O. Krueger
07-08	되살아나는 일본경제 : 전망과 과제	Fukagawa Yukiko
07-09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글로벌 기업 전략	Ben Verwaayen
07-10	한-미 FTA : 미국의 시각	Jeffrey Schott
07-11	한-미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Barry Eichengreen
08-01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의 세계화 전략	Anne O. Krueger
08-02	2008년 미국경제와 세계금융시장 동향	Allen Sinai
08-03	유럽의 경제침체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Guy Sorman
08-04	차기 미국 대통령이 풀어야 할 세계적 도전	James A. Baker III
08-05	일본 증권시장의 현재와 전망	Astushi Saito
08-06	대선 이후 미국의 정치·경제, 어떻게 전개되나?	Phil Gramm
08-07	세계 및 아시아 경제·금융 전망	Charles Dallara
08-08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 어떻게 하나?	Guy Sorman
09-01	2009년 한국 경제와 세계 및 아시아 경제 전망	Subir Lall

09-02	혼란과 전환기의 경쟁력 강화: 과제와 전망	Deborah Wince-Smith
09-03	위기 속의 미국 및 세계 경제와 금융: 전망과 정책대응	Allen Sinai
09-04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	Jeffrey Schott
09-05	하강하는 세계경제와 케인지언 정책처방의 실효성	Justin Yifu Lin
10-01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 변화하는 EU: 한국의 기회는?	Jean-Pierre Lehmann
10-02	위기 이후 미국 및 세계경제 전망, 그리고 유산과 정책과제	Allen Sinai

2. 세계경제지평

94-01	유목적 세계의 도전	Jacques Attali
94-02	세계주의와 지역주의 混在	이 영 선
94-03	기회와 위협으로서의 中國	김 완 순
94-04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Paul Kennedy
94-05	화폐의 종말/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홍기택 / 주한광
94-06	UR이후 아·태 경제협력의 과제	유 재 원
94-07	환경과 무역	나성린 / 김승진
94-08	円高에 따른 일본의 산업구조조정과 한국경제의 대응	이 중 윤
94-09	세계경제환경 변화와 우리의 선택	사공 일
94-10	개방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방향	김 중 석
95-01	한국경제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 도전과 기회	사공 일
95-02	기업의 세계화와 경쟁규범	김 완 순
95-03	무엇이 세계화인가	김 병 주
95-04	한국과 미국: 2000년의 세계경제	James Laney
95-05	세계경제는 좌초할 것인가	김 적 교
95-06	엔화강세 지속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박 진 근
95-07	세계화와 한국경제: 호황인가 거품인가	구 본 호
95-08	확산되는 특혜무역협정과 정책과제	남 중 현

95-09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홍 원 탁
95-10	일본산업의 네트워크 구조와 그 효율성	이 종 윤
95-11	국제경쟁력의 갈등	이 재 응
95-12	해방후 우리 경제 반세기의 회고와 전망	김 광 석
96-01	국내 선물시장의 구상과 전망	이 선
96-02	중소기업시대 열릴 것인가	유 동 길
96-03	단체교섭제도有感	배 무 기
96-04	세계화와 기업의 변신	지 청
96-05	우리나라 금융시장개방의 추진방향	박 영 철
96-06	다변주의 對 지역주의, 兩立은 가능한가?	김 세 원
96-07	派生金融商品의 위험과 효용	민 상 기
96-08	최근 경제위기감의 실체와 대응방향	김 광 석
96-09	경제발전, 제도개혁, 경쟁질서의 확립	이 성 섭
96-10	轉機를 맞이한 정부의 기능	김 병 주
96-11	WTO의 새로운 협상의제	김 완 순
97-01	노동법개정 難局의 해법: 교섭창구 단일화를 前提한 複數勞組 허용	김 수 곤
97-02	감속성장, 왜 바람직한가	김 적 교
97-03	韓寶사태의 敎訓	이 재 응
97-04	세계화시대의 경제운영	남 덕 우
97-05	기업성장의 虛實: 韓寶事態에서 얻는 敎訓	지 청
97-06	북한의 식량난과 집단농장체제	문 팔 용
97-07	한국의 금융개혁	윤 계 섭
97-08	高齡化 社會의 도래와 財政危機	박 종 기
97-09	外換危機의 일반모형을 감안한 우리의 대응방향	박 진 근
97-10	벤처기업시대를 열어가려면	유 동 길
98-01	한국의 經濟奇蹟은 끝날 것인가?	남 중 현
98-02	파라다임의 대전환없이는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	송 대 희

98-03	기업구조조정과 바람직한 은행-기업관계	남 상 우
98-04	새로운 기업지배구조의 모색과 사외이사의 역할	이 영 기
98-05	고투자-고저축 고리의 단절을 위한 제언	이 영 탁
99-01	연금개혁의 전망과 과제	박 종 기
99-02	지하철과업과 다시 보는 노조전임자 문제	김 수 곤
99-03	금융구조조정과 중소기업금융	박 준 경
99-04	21세기를 향한 환경정책과제	김 종 기
99-05	소득분배 문제의 실상과 대응방향	김 광 석
00-01	2000년 경제전망 및 향후 과제	김 준 경
00-02	세계금융체제에 관한 논의, 어떻게 되고 있나	사공 일
00-03	아시아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미래	사공 일
00-04	高비용 低능률 구조의 부활	이 중 윤
00-05	아시아 경제회복, 지속될 것인가?	사공 일
00-06	국제경제환경과 한국경제	조 윤 제
00-07	기업경영 감시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이 재 응
00-08	미국의 구조조정 경험과 교훈	이 영 세
01-01	한국산업의 경쟁력 위기와 향후 진로	김 도 훈
01-02	주 5일 근무제 도입 신중해야	박 영 범

3. 연구보고서 (세계경제 시리즈)

94-01	UR 이후 아·태경제협력의 과제와 한국의 선택	유 재 원
94-02	환경-무역관계가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	김승진 / 나성린
94-03	円高에 따른 일본의 산업구조조정과 한국경제의 대응	이 중 윤
94-04	개방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방향	김 종 석
95-01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정책대응	주한광 / 김승진
95-02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기업: 한·일 기업의 수영가능성 비교	이 재 규
95-03	WTO 체제와 우리의 대응	김 지 흥

96-01	국내선물시장에 대한 구상과 전망	이 선
96-02	일본산업의 네트워크구조와 그 효율성	이 중 윤
97-01	루마니아의 경제현황과 주요개혁과제	김광석 / 김병주 / 고일동
98-01	우리경제의 成長要因과 成長潛在力 展望	김 광 석
98-02	한국과 ASEAN諸國間 무역구조의 변화추이와 대응방향	김 승 진
98-03	The Global Trading System: Challenges Ahead	
	Wan-Soon Kim / Nakgyoon Choi	
98-04	정보화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대응방안	박 중 국
00-01	Financial Crisis and Industry Policy in Korea	
	Young Sae Lee / Young Seung Jung	
01-01	한국에서의 기술이전과 정보의 역할	이 영 세
01-02	우리나라의 산업·무역정책 전개과정	김 광 석

4. 초청강연자료 (특별강연 시리즈)

94-01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Paul Kennedy
94-02	미국과 일본간의 기술경쟁과 한국에 미친 영향	Ronald Morse
94-03	일본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Toyoo Gyohten
94-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Allen Sinai
94-05	국제환율제도 이대로 좋은가	John Williamson
94-06	The Promises of the WTO for the Trading Community	Arther Dunkel
95-01	멕시코 폐소화 위기와 세계금융시장 동향	Charles Dallara
95-02	세계경제 동향과 미국경제 전망	Allen Sinai
95-03	새로운 게임,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전략	Lester Thurow
95-04	미국-북한관계 전망	Robert Scalapino
95-05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한반도	James Baker III
95-06	미·일 무역마찰과 한국	Anne Krueger
95-07	동북아경제권 개발 전망-일본의 시각	Hisao Kanamori
96-01	Prospects of Global Economy in 1996	Allen Sinai

96-02	유럽연합(EU)의 앞날과 세계경제	Örström Möller
96-03	세계경제와 OECD의 역할	Donald Johnston
96-04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정치적 배경과 영향	Francis Fukuyama
96-05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새 역할	A.W. Clausen
97-01	다국적기업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Wendy Dobson
97-02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정책	William J. Perry
97-03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혁	Donald K. Hunn
98-01	범 세계적 기업과 다자간 투자협정	Edward M. Graham
98-02	변화속의 안정: 새로운 한·미 관계의 모색	W. Anthony Lake
98-03	한국: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중심으로	Donald P. Gregg
98-04	경제적 측면에서 본 독일 통일의 교훈	Juergen B. Donges
98-05	세계화와 종족화-20세기 말의 딜레마	Guy Sorman
99-01	북한의 정치·경제상황과 동북아 안보	Marcus Noland
99-02	엔-달러 환율과 국제금융시장	Kenneth S. Courtis
99-03	한국과 아시아 경제: 전망과 정책대응	Donald Johnston / Hubert Neiss
99-04	미국과 일본 경제의 비교 평가	Hugh T. Patrick
99-05	세계경제: 도전과 전망	Rudiger Dornbusch
00-01	금융세계화, 어떻게 대처하나	James P. Rooney
00-02	2000년 국제금융 및 신흥시장 전망	Charles Dallara / Robert Hormats

5. 전문가 진단

- 한국 FTA 정책의 虛와 實 남종현
- A Foreign Businessman's Observations on the Korean Economy & Other Things William Oberlin
- 세계속의 한국경제 : 과제와 전망 사공 일 編

6. 기타 보고서

- The Global Economy and Korea 사공 일 編
- The Multilateral Trading and Financial System 사공 일 編
- Major Issues for the Global Trade and Financial System 사공 일 編
- 탈냉전시대 韓美 정치·경제협력관계 사공 일 / C. Fred Bergsten 編
- 새로운 韓美 협력체제의 모색 사공 일 / C. Fred Bergsten 編
- 세계화시대의 英美관계 사공 일 / C. Fred Bergsten 編
- 한반도 통일 및 韓美 관계의 현황과 과제 사공 일 編
-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un(I) 세계경제연구원 編
-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un(Ⅱ) 세계경제연구원 編
-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un(Ⅲ) 세계경제연구원 編
-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un(Ⅳ) 세계경제연구원 編
- 세계반도체산업의 발전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세계경제연구원 編
- 한국의 금융개혁 세계경제연구원 編
- Policy Priorities for the Unified Korean Economy 사공 일 / 김광석 編
- The Fifty Year of the GATT/WTO: Past Performance and Future Challenges 사공 일 / 김광석 編
-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 사공 일 / 구영훈 編
- 아시아 금융위기와 한·미관계 세계경제연구원 編
- For Better Tomorrow: Asia-Europe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ASEM Vision Group
- 제6차 한·미 21세기 위원회 보고서 세계경제연구원 編
- 동북아시아포럼 2000 세계경제연구원 編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 사공 일 / 왕윤중
- 세계 자유무역 의제를 위한 여건조성 세계경제연구원 編
- Rebuild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PG서울보고서) Emerging Markets Encinent Persons Group 編

-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I) 세계경제연구원 編
- 새로운 세계질서: 기회와 도전 -
-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II) 세계경제연구원 編
- 세계경제 및 주요국 경제의 앞날 -
-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III) 세계경제연구원 編
- 한국 경제의 진로 -
- 세계경제연구원 개원 10주년 국제회의 세계경제연구원 編
- 세계환율체제 개편과 동아시아 경제 John Williamson
- 아시아 화폐단일화, 가능한가? Robert Mundell
- 창업활성화, 어떻게 하나 세계경제연구원 編
- 세계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Berry Eichengreen
- 미국의 힘은 얼마나 강하며, 중국의 부상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Paul Kennedy / Bernard K. Gordon
- 2006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 Richard N. Cooper / George Scalise
- 아시아 경제통합과 세계 속의 한국경제 Eisuke Sakakibara / Charles Dallara
- 2007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 Guy Sorman / Tarun Das
- Globalization and Korean Financial Sector (세계화 시대의 한국 금융산업) 세계경제연구원 編
- 2007 IGE/Prudential International Finance Lecture David Hale / Jerald Schiff
- 2008 IGE/Prudential International Finance Lecture Robert C. Pozen / Jeffrey R. Shafer
- Lessons from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Its Implications for the World and Korea 세계경제연구원 編

• 2009 IGE/Prudential International Finance Lecture

Danny Leipziger / Anne O. Krueger

• 2009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

Guy Sorman / Jeffrey J. Schott

• G-20 Reform Initiative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Financial Regulation

세계경제연구원 編

• 2010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

Yukiko Fukagawa / Danny Leipziger

• G20 서울정상회의와 개발의제

세계경제연구원 編

G20 서울정상회의와 개발의제

2010년 10월 27일 인쇄

2010년 10월 30일 발행

발행인 남종현

발행 세계경제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인쇄 오롬시스템(주) 2273-7011

ISBN 978-89-86828-67-2

정가 10,000원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 개인회원
- 법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 연구원 주최 행사에 우선 초청
 - 연구원 주최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 무료 제공
 - 법인 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개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 연구원 주최 행사에 초청
 - 행사 참가비 할인
 - 연구원이 발간하는 일부 간행물 무료 제공
- 후원회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회원 가입 문의
 -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세계경제연구원
 - 연락처: 551-3334~7(전화) 551-3339(팩스)
 - E-mail: igenet@igenet.com
 - <http://www.igenet.com>

수출확대! 녹색성장! 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KoFC 한국정책금융공사
KoFC

금융대동맥 KoFC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금융대동맥이 되었습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국민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정책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대한민국 대표 금융기관입니다.
주요사업 중소기업 지원 | 녹색·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지역개발·사회기반시설 확충 |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

www.kofc.or.kr

150-87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Tel. 02-1644-4100

IGE 세계경제연구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TEL : 02) 551-3334/7, FAX : 02) 551-3339
E-mail : igenet@igenet.com
(Website)<http://www.igenet.com>



정가 10,000원